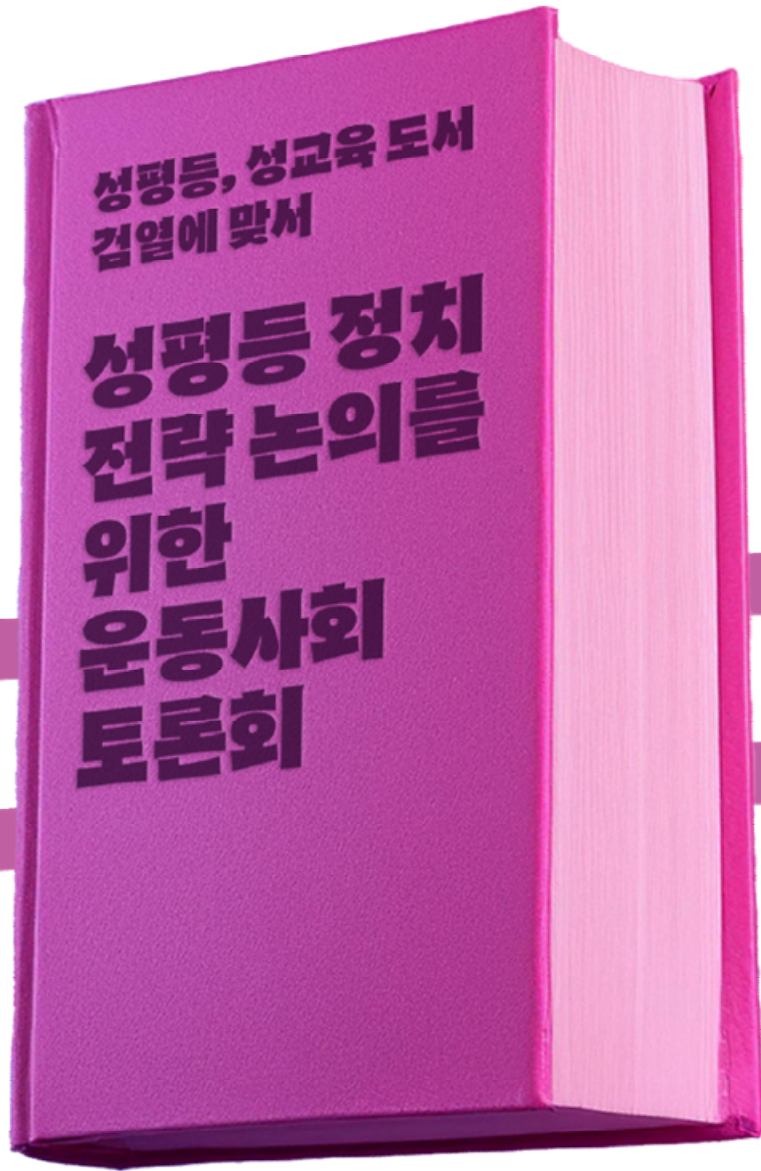


성평등 ·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30 ~ 18:00
장 소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
주 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내] 토론회 진행순서

1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평등 정치, 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 10:30~12:30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발제 1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애여성공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평등 정치
발제 2	진냥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전교조 여성위원회)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세력에 가로막힌 성평등교육, 어떤 권리들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발제 3	권수정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성평등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필요한 고민과 과제

2부: 성평등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 정치에 맞선 운동의 도전과 전략 | 13:30~15:30

사회 : 기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토론 1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 동의’ 없는 성평등 사회 가능한가
토론 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가만히 있으라” 섹슈얼리티 발화를 금지하라
토론 3	이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나이주의와 보호주의는 청소년을 어떻게 미성숙하게 만드는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
토론 4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변화와 성평등 주체로서의 남성, 남성청(소)년 성교육 활동 경험으로 가능성 짚어보기
토론 5	타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 권리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 접근성, 문화, 관점, 태도로 넓히는 활동

3부: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는 지역 성평등 정치 기획하기 | 16:00~18:00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제 1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성평등 정치 실현을 위한 차제연 활동 소개와 계획
토론 1	이상미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충남 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 폐기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응 경험 속에서 지역 내 성평등 정치 를 위한 지역사회/지역운동의 과제 나누기
토론 2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지역-성평등-정치
토론 3	써니(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간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1부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평등 정치, 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1부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발제 1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애여성공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평등 정치
발제 2	진냥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전교조 여성위원회)	반페미니즘, 반동성에 세력에 가로막힌 성평등교육, 어떤 권리들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발제 3	권수정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성평등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필요한 고민과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평등 정치

•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장애여성공감)

1. 성평등 권리를 박탈해온 성차별 정치

19대 대선시기 성평등 없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페미니즘 운동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낙태죄 폐지 운동, N번방 사건 대응, 미투운동 등이 가열차게 전개되는 속에서도 성평등 정치를 외면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나중엔 정치로 성차별을 정당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당당한 부정은 갑툭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협받아온 성평등의 위기를 재확인한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성차별 정치는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부정적 기점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20대 대선 패배이후 여전히 성평등 정치는 외면하고 있다. 여야할 것 없는 성평등 정치의 부재 속에 윤석열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젠더 기반 폭력의 원인인 불평등의 문제를 가리고 있다.

성평등 수난사는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 수난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여러 글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성평등 퇴보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적 지향'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성소수자 인권 관련한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다. 해당 성교육 표준안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 있었다. 2016년에는 “사회이슈 아닌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2017년 보수기독교 혐오세력의 동성애 혐오는 보다 본격화되었다.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성평등’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보수개신교의 공격과 난동으로 파행에 이르렀다. 직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할 계획을 밝혔다.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흐름속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는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며 2년 이내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9년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별'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차별에는 동성애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40명이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규정하며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2020년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의 선동은 나다움책 회수의 기반이 되었고, 2021년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한다며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이른바 '페미게이트'가 열렸다. 멈추지 않

은 차별과 혐오의 흐름 속에서 2022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젠더폭력’,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모두 ‘폭력’으로 대체했으며 교육과정에서는 '성소수자', '재생산', '섹슈얼리티'와 더불어 '성평등' 용어가 삭제되었다.¹ 2024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14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사업은 전액삭감되었다.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등 상담소 운영, 의료비, 주거지원 운영비 등 피해자 지원 예산은 80억원 가량을 줄였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 중복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2.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평등

성평등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지 않는 정치권은 젠더 폭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성적 즐거움과 성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억압하고 성별이분법 구조를 강화한다.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이 마치 개인, 성별, 세대 등의 대립으로 보여지는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지워진다. 정치권이 성평등을 퇴행시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삶을 살아갈 권리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성평등 정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이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왔다. 양성평등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억압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세력과 정치권을 비판해왔다. 이 의제를 우회하여서는 성평등이 가능하지 않기에, 성평등 없이 평등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기에, 차제연 운동의 핵심적인 방향이었다.

그 일환으로 차제연은 2021년 21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사회적 과제를 찾기 위한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 가족, 교육, 성별정체성’ 의제를 중요한 평등정책으로 토론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통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고민하였다.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는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터에서의 (성)차별, 괴롭힘, 성희롱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현상이 아님”²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는 이후 10월 동아계약 고용 성차별 문제를 가시화 하며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민에게 제안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지금 현행법상 성희롱은 다 고용 영역의 문제(직장 내 성희롱)예요. 하지만 성희롱이 고용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 범위에 성희롱이 포함된다면, 성희롱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고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정의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은 근로자의 범위를 더 넓게 보기 때문에, 근로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비정형노동자까지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중략) 또한 아직까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 법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의 문구를 넣고 있잖아요.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엔 그런 문구가 다 빠졌어요. 피해자의 감정이 어떤 요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³

1 문, 퇴행하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23년

2 조혜인,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 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1차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과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만나는가], 21-22p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차별사유로서 가족 상황은 “성별/성역할 고정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권리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제한되는지 고려해야 하며”⁴ 교육의 경우 평등하게 접근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넘어서 소수자를 타자화하고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성별정체성은 “성별이분법적인 구조가(중략)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서”⁵ 실제 학교 현장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남녀 분반, 남녀 학번 등 이분법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며 학교를 다니면서 정체성과 관련해 가장 힘들었던 점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교육의 부재’(66.1%)로 꼽았다.”⁶ 차급법에서는 교육의 기회 및 교육 내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에서 차별금지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평등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처럼 차별의 문제는 하나의 상황과 조건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한 사람의 복잡한 삶의 서사를 읽고 답아야 한다. 이 때 성평등이 부수적인 의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 사회 전반의 평등의 가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목표여야 하는지 여러 현장에서 고민해온 운동의 동료들과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이 후퇴시킨 평등할 권리

2023년 충남, 충북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가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라며 폐기 민원을 제기했다. 공공도서관은 이를 받아들여 성평등 도서를 퇴출하기 시작했다. 연이어 경기도 학교 도서관 내에서도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 도서를 접하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도서를 폐기하였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성평등도서를 검열하고 폐기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탄압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성적 권리가 무시되거나 성을 배우면 안될 대상이라며 배제됐던 어린이,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이미 교육 현장 안에서 차별적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권리에서 누가 배제되는가, 용인되는 성적권리는 무엇인가, 성별이분법에 부합하는 정체성과 몸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성평등 교육과 도서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제를 고민해가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차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평등을 우리의 권리로 되찾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젠더폭력을 각각 개별적인 범죄로만 다루고자 하는 정치계의 태도는 젠더폭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상담·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행법상 성폭력, 가정폭력,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성매매, 스토킹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젠더폭력은 각기 다른 특별법을 통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치 각각 다른 피해자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사회적 공분을 살 때마다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한 보호담론만을 강화하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예를 들어

3 조혜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 ‘괴롭힘’, ‘성희롱’ 예방하는 일. 일다, 2021
 4 몽,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 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3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복합차별,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5 박한희,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 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2차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 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6 서울신문, 벼랑 끝에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2021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 여성계는 다시금 비동의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그쳤다)”⁷

젠더폭력의 구조적 차별과 혐오를 묵인한 채 차별과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의 보수성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교육의 보수화를 촉진해왔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얼마나 강하게 처벌되는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고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⁸ 또한 “발달장애인/아동의 경우 안전을 위해 자기결정권의 제한/통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다수 받기도 하는데 허락과 통제의 시간은 장애여성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로 인식되며 그 권력은 정당성을 가지고 보호하는 자에게 위임”⁹되는 것이 섹슈얼리티를 대하는 대부분의 태도다. 이때 성폭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호와 예방, 금지 중심의 성교육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지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개인의 역할과 태도를 문제의 원인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현실을 지운 성교육은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좁히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 정보, 비용, 장소 등을 마련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중략) 사회적인 차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며 손해를 복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자원이 부족하고 차별받는 이들이 성적 즐거움을 포기하도록 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서 낙인과 또다른 차별에 노출되어 고통을 유발한다.”¹⁰

섹슈얼리티를 정치화하는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비정상적이거나 취약한 몸, 탈성애화 혹은 과잉성애화된 몸이란 규정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몸과 감정을 표현하고, 긴장과 갈등을 매순간 맞이하며,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고 타협해가며,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넓혀가는 일로 시민권을 고민해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몸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시작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치행동일 수 있다. 나와 다른 몸과 만나는 경험은 다양한 삶의 조건들과 젠더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 지 찾고 서로의 경험을 연결해가는 동료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평등 성교육 도서 폐기사태는 교육의 기회를 침해하는 차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성평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우며, 몸과 섹슈얼리티를 정치화할 수 없는 차별적 구조에 놓이게 한다. 차별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국가정책이 젠더 '폭력'으로 성평등을 축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젠더 폭력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있는 것이다. 젠더 폭력 또한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의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관계와 자기정체성 탐구, 즐거움에 대한 권리, 평등한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는 성적 권리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

7 박아름, [2022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백래시의 시대, 페미니즘의 재반격- 반성폭력 운동과 강간 개념의 변화: 동의 및 적극적 합의담론을 중심으로], 13p

8 장병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 집담회-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 범죄예방교육을 넘어 평등과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57p

9 이진희, [2022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백래시의 시대, 페미니즘의 재반격-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성적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모색]

10 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2023년 1월 뉴스페이퍼-[국내이슈] 동의, 합의, 욕망 사이- 소수자의 즐거움을 바라지 않는 사회에 저항하는 성교육]

4.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정치에 맞서는 성평등 정치

교육 공간인 학교가 성평등 가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차별받는 주체가 개입하지 못하게 문을 닫는 방식은 차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왜 ‘좋은’ 혹은 ‘착한’ 성교육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좋은’ 혹은 ‘착한’ 성교육인가. 섹슈얼리티가 보호와 통제, 성적동의 능력과 자격문제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성평등 정치로 정상규범의 균열을 내고 평등 정치의 기회와 공간을 확장하는 시도들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치적 역량, 동등한 시민으로 연결되는 역량, 서로를 돌보는 역량이 필요하다(중략) 어린시절부터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존재를 지지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양육자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정치적 활동을 토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학교, 정치적 활동과 시민적 참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학교 등(중략) 각자가 가진 능력들의 차이가 차별의조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기대고 소통하는 힘이 되는 사회에서, 학교는 비로소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다.”¹¹

성평등 정치는 이성애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의 문제제기 하는 실천이다. 차금법 운동의 논의는 이 성평등 정치의 실현과 확장을 보다 더 확장하며 폭넓게 이야기하며 이어가고자 한다. 사회 재생산의 위기 속에서 함께 살고 유대를 맺어 상호의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연대를 확장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여성/남성, 이성애/동성애, 비장애인/장애인, 선주민/이주민, 시스젠더/트랜스젠더, 정상가족/취약가족, 생산적인 인구/쓸모 없는 인구 등으로 구분되어 온 위계를 발생시키는 차별을 철폐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금법 운동에서 성적 낙인과 혐오를 차별이라고 말해온 활동은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중요한 힘이다. 취약성을 가진 몸으로 연결된 차별의 감각은 성적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평등이 왜 필요한지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누구보다 학교의 정상 규범이 만들어내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이들도. 그들은 학교의 수많은 성별 분리 구조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시공간에서의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때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¹² 성평등 정치의 전망을 위한 우리의 전략으로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의제가 서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만큼 다른 길을 바라는 이들이 보이기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낙인을 씌우고 차별을 강화하는 성차별 정치에 맞서는 성평등 정치를 계속 모색하고 연결해 가보자.

11 난다,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가로지르길2]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 - 교육 체제 전환, 무엇을 어떻게 전환해야하는가]

12 남미자, *오늘의 교육* Vol 77(2023년 11+12월호) [“학부모 혐오’와 교육공동체의 불가능성- 낡은 정상성의 학교와 불화(不和)하는 트랜스젠더], *교육공동체 벗*, 190p

발제 2.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세력에 가로막힌 성평등교육, 어떤 권리들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 진냥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전교조 여성위원회)

성평등교육이 가로막혀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팩트다. 한국 교육사에서 성평등교육은 무수한 요구에도 전면적으로 도입된 바 없으며 그 이유는 성평등교육을 반대하는 사회적 담론이 강력하게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껏 성평등교육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며, 성평등교육을 막고 있는 이들이 누구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들여 분노해왔다. 그러나 성평등교육이 막고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빼앗아가고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외쳐졌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권리들이 지연되고 있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는 무엇을 박탈하고/박탈당하고 있는가?**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인지교육 → 성평등교육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늘 개념의 혼란을 마주하게 된다. 공식화된 바 없다는 것은 공식화된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다. 한국에서 섹슈얼리티교육은 조각 조각 나누어서 분절적으로 제도화되었고 각각의 제도가 양성체제와 시장, 철학적 지향을 별도로 가지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칠게 살펴보면, 양성평등교육 vs 성평등교육의 용어사용은 주로 법적 용어 사용이나 반동성애/혐오세력과의 관계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성인지교육은 성주류화정책 또는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접근된다. 성교육은 신체적, 자연적 성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되고 있으나 실제로 보건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

요컨대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체적 교육과 섹슈얼리티 교육이 통합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섹슈얼리티 교육조차도 파편화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섹슈얼리티 교육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이 최근에 ‘생태전환교육’으로 명명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사회가, 이 교육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고 동시대인으로서 어떤 세상을 함께 구성해내고자 제안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평등은 동의하지만 여성할당제는 반대하고 성폭력에는 분노하지만 페미니스트는 혐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지향없이 개인적 실천에 머무르는 교육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거부당하는 실제 삶과 경험

한국 사회 전반에 안티페미니즘 흐름이 거세지고 있으며 여성 및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양상은 학교 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스쿨미투가 공론화되면서 학교 사회 및 학생 사회에서 ‘성(sexuality)’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차별과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성평등 이슈에 관해서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최윤정 외, 2019). 하지만 학교 성교육은 학생간 인식의 차이나 학생들의 경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남미자, 심에스더, 이희진, 2021).

이는 학생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교사나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여성 교사로서의 삶, 퀴어 교사로서의 경험이 교사의 전문성에 통합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지 않고 최대한 ‘탈색’시켜 교육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강요받는다. 이는 교육권의 침해이자 동시에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동권 침해다.

‘잘 키워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성평등교육을 지지하는 주장이든, 반대하는 주장이든 대부분의 논리가 학생들을 바르게 ‘키워내지 못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미 지니고 있고 그렇기에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존엄한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김윤정, 2021. 3. 7.)”이다. 즉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육적 실패가 아니라 권리의 박탈이자 침해인 것이다.

뉴욕시는 K1(유치원)부터 K12(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AIDS/HIV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 예방교육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들을 위한 가이드, 수업예시 및 자료, 가정과 소통을 위한 안내문까지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 가이드에서는 교육의 목표 중 하나를 에이즈 또는 HIV 보균자와 ‘우애를 나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하고 어떤 학생의 HIV 상태를 가정하지 않고, 대신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HIV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지향이다. 즉, 폭력예방 또는 미래를 위한 예비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 향유를 위한 성평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권으로서 성평등교육

성평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평등한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성적 시민권은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의 사회질서 속에서 성적 주제로 인정받지 못한 비시민의 성적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복원하는 것이며, 성과 관련하여 정상/비정상을 구분하는 정상성을 해체함으로써 성적(sexual) 비시민이었던 존재들의 시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연대이다(남미자, 이희진, 2022). 다시 말해 성평등은 젠더간의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섹슈얼리티를 층위로 가지는 차별과 폭력, 부조리와 비합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차하기 때문이다. 학교 성교육은 성(sexuality)을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에서부터 성(sexuality) 정치학까지, 다시 말해 성교육은 성적 시민권(sexual citizenship)을 중심 원리로

다루어야 한다. 즉, 성평등교육은 학생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하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위험한 존재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어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친밀성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남미자, 이희진, 2022). 따라서 성적 시민권의 관점에서의 성교육은 기존의 차별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청소년을 성적 권리의 주체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는, 관계 맺기의 과정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배경내, 2018)임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실천(향유)해가도록 하는 시민교육으로서 성평등교육은 자리잡아야 한다.

〈주요한 참고문헌〉

- 남미자, 김자영, 배정현, 이희진(2022). 중고등학생의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 실태와 대응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연구원
- 남미자, 심에스더, 이희진(2021). 안전하고 평등한 초중등학교 성교육 방안: 포괄적 성교육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남미자, 심에스더, 이희진(2023). 학교에서 섹슈얼리티를 말하라. 학이시습.
- 남미자, 이희진(2022). 초중등학교 성교육의 대안적 접근: 성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37~71.

〈참고문헌〉

- 김윤정(2021. 3. 7.). 여성청소년, 권리로서 성적 권리에 대해 말하다. Retrieved from <https://amnesty.or.kr/40107>
- 배경내(2018), “성적 시민권과 발달장애인의 존엄을 다시 말하다”, 한국장애학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 안의 또 다른 분리, 모두의 해방을 향하여!』 추계학술대회 토론문(2018.11.9.).
- 최윤정, 박성정, 장희영, 김효경, & 최윤정(2019).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제 3.

노동조합이 성평등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필요한 고민과 과제

• 권수정 (민주노총)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3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여러차례 총파업을 했고 그때마다 노동현안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구들이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지만 여성의제는 한번도 포함된 적이 없다. 남성이 많은 업종의 노동조합은 여성이 없어서 여성사업이 필요하지 않고, 여성이 많은 업종의 노동조합은 모든 사업이 여성사업인지라 따로 여성사업을 하지 않는다.

1997년 여성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2년 전교조에서 50%비율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했고,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30% 비율의 여성할당제가 실시되었다. 2024년 9월 진행된 여성활동가 대회는 전국에서 120여명이 모여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라는 주제로 20년동안 실시되어온 여성할당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으로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 장애, 청년 등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토론되었다. 여성조합원의 비율이 40%를 넘긴 시점인 것도 한 몫을 했다. 2009년 설치되었으나 운영되지 않다가 2023년 복원된 성평등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성평등강사단 양성교육은 올해로 10기의 수강생을 배출했고, 10주년을 기념하는 보수교육이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다.

1998년 파견법의 도입은 국가의 기획에 의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였다. 청소, 식당, 콜센터, 마트, 금융, 톨게이트 수납업무의 여성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싸웠고, 지금 이순간 불타버린 아리셀 공장에서 죽은 23명의 노동자중 18명이 여성이다. 2024년 8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입국했고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기획에 의한 여성노동의 저임금화, 신호탄으로 보인다.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삭제한 여성노동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계된 사회이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성노동자 모델'이다.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할 때 여성은 노동자가 아니다. 남성이 노동자일 때, 여성은 주부다. 남성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 때, 여성은 집에서 논다는 말을 들으며 사랑과 헌신으로 돌봄을 수행한다. 사랑과 헌신은 노동이 아니며 신성하여 감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러나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조 9천억이다. 같은 해 대한민

국 예산이 470조 였던걸 감안하면 한국사회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지불되지 않은 여성의 노동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노동자 모델’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노동 할 때 집에서 전일적으로 돌봄의 역할을 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계되었다. 있는 여성의 노동을 보지 않고(비가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그림자) 불평등할 뿐 아니라, 청년들이 가난하여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시대적 모델이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일은 노동이 아니고, 여성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집요한 선언이고 구호다.

1) 남성이 많은 직종은 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한 결과다.

배 만드는, 철강을 만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 정규직 노동은 남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공장은 남성노동자의 몸을 기본값으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화장실도 없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여성이 많은 직종은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파견법, 국가의 기획에 의한 여성노동에 대한 비정규직화의 결과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라인에서 볼트를 박는 남성 노동의 가치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식당에서 조리하는 여성 노동의 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환산되길래 다른가? 달라야 하는가? 노동의 가치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3)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여성이 많이 취업해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돌아오면 남성동기들은 모두 승진했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다행이다. 찢리지는 않는다. 더욱 문제는 경력단절이다. 출산과 양육으로 퇴직했다가 다시 노동 시장으로 오는 여성에게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만 주어진다. 왜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경력이 되지 못하는가? 여성은 노동자가 아니고, 여성이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일가정 양립의 현실은 육아를 지원해주는 또 한사람의 여성노동이 있어야 가능한 미션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출산이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이 가치가 없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4) 지불되지 않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 노동자가 내일도 출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생산노동
- 인간종의 재생산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되는 노동의 가치는 임금이고,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존권이다. 그러므로 무산자에게 노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임금이다.

굳이 일베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남성들의 분노는 여기서 기인한다.

1) 여성이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임금을 달라고 해서 분노하고(더이상 가정 주부가 아니야!)

2) 여성이 돌봐주지 않아 분노한다. (심지어 헤어지자고 하다니!)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분노의 게이지’가 그렇고 ‘지인능욕’이 그렇다.

1인가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이미 결혼한 가정의 경우 또한 여성들은 더 이상 전일적으로 남성을 돌보는 배우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여성들이 주장해서 그렇게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무한 착취 질서의 결과다. 비정규직에서 더 나아가 플랫폼노동, 초단시간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이 더 불안해지고, 더 가난해진다. 부족하나마 먹고사는 것을 해결해 온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파괴한 것이 자본이다. 문제는 자본주의고, 문제는 가부장제다.

드디어 남성이 스스로 돌보고 성찰하는 ‘근대적 개인’이라는 존재가 될 기회를 얻었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폐기하고 스스로 돌보는 연대의 노동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 모델은 1인가구를 기본값으로 한다. 내가 나를 돌보고, 홀로 돌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연대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다. 장시간노동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나 가능하다. 노동자(남성)를 돌봐주는 배우자(여성)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이윤이 아니라 인간을,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기본값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것이 체제전환 운동이다. 성찰해야 하고, 조직되어야 하며, 요구하여, 쟁취해야 한다. 평등해서 낯설고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온다.

2. 성찰 ; 성평등강사단 양성 교육

총 80시간 교육 중 7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증을 주는 성평등 강사단 양성교육은 2015년 시작되어 올해 10기 300여명의 강사단을 배출했다. 성평등 강사단 양성교육은 처음부터 페미니즘 페다고지를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 차별을 낳는 불평등한 구조와 사회적 모순을 학습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에 나서는 여성간부육성을 목표로 한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페미니즘 이론, 여성노동운동사, 성주류화 국제동향, 직장내성희롱·괴롭힘 관련 법, 반성폭력, 이주여성,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인권 등이 교육과정이다. 교육 이수 후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을 위한 교안을 만들어 강사활동을 하는 동지들이 있고,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페미니즘 공부를 한 동지들도 있다. 강사활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소속 노동조합 간부활동을 하고, 임원이 되기도 한다. 교육을 이수한 많은 동지들이 ‘내 삶을 바꾼 성평등 강사단 교육’이라고 말한다.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누가 교육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여성단체를 비롯해 전문가를 섭외하여 성평등교육을 했을 때 현장에서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우리 현장과는 안 맞는 것 같다.’ 성평등 강사단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지들이 교육한 후 잘 모르겠다는 평가와 우리 현장과 안 맞는 것 같다는 평가는 사라졌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했던) 여성노동자가 현장의 언어로 번역하여 성평등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가맹조직별로 편차는 있지만 여성노동자가 강사가 되어 직접 교육하는 성평등교육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다.

12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현장이 일상적인 성폭력에 노출된 응급상황이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인 이유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주제로 하는 교육이 가장 많다. 당연한 것이 한두번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교육을 한조직과 한번도 교육을 하지 않은 조직은 분명 다르다.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성평등 강사단 양성교육기관을 목표로 10년을 더 노력하면 무엇이 바뀔까? 민주노총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가맹조직과 지역별로 성평등강사단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공통교안을 제작하고, 새로운 교안을 공유하고, 강의후기를 남기고, 강사가 검색되는 성평등강사의 활동이 총화되는 시스템을 구상한다.

3. 성찰 ;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민주노총의 반성폭력운동은 주로 성폭력 사건이 조직에 제소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피해자와의 연대 혹은 피해자 대리인의 위치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초기 여성위원회가 성장하기도 했고, 지금도 여성위원회의 주요사업 중 하나다. 가맹산하조직의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동지들이 민주노총 여성사업담당자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중 하나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어려움은 성폭력사건처리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동일하다.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어떤 성폭력 사건이 제소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로 정리할 방법이 없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사건 처리의 경험이 조직적으로 축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검색해도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건이 제소되면 다시 한번 처음이라는 것이다.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동지가 바뀌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없었던 사건이 된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역사로 정리되지 못하니, 재발 방지 할 방법도 없다. 문화를 어떻게 바꾸겠는가?

모든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조직의 어딘가에 차곡차곡 보관되고 있어서, 검색하면 조회가 되어야 한다. 진상조사보고서의 공개방식을 포함하여 민주노총이 성폭력사건 처리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다. 성폭력사건처리 매뉴얼은 사건이 제소되었을 때 누가 접수하여,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개선의 과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관한 조직적인 합의과정이다. 민주노총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정리할 방법이 없으니, 매뉴얼을 다시 정리하는 셈이다.

4. 조직 ; 성평등한 조직운동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성주류화 정책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조직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사업이 계토화된 여성위원회 사업이 아니라 조직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사업과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성인지통계의 생산과 관리, 성별균형참여와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기구 설치, 인권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성평등교육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5. 요구

1)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평등노동공시제 ; 채용부터 임금, 승진, 교육, 퇴직까지
- 성별임금격차 해소 법 제정

2)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 차별금지법 제정
- 산업재해 통계 성별화
- 이주와 장애 고려한 산업현장 안전 보건
- 작업중지권 명시 : 직장내 성희롱에 따른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유형으로 포함
- 성인적 산업안전정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3) 사각지대 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 노동관계법에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 삭제

4) 돌봄 중심 사회로의 변화

- 노동시간 단축 ; 주4일제 32시간 (주5일제 30시간)
-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돌봄 공공성 강화
- 최저임금 미만의 이주거사노동자 도입 반대

5)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

- 여성가족부 정상화
- 고용노동부 내 성평등 노동국 신설
- 성평등단협 법제화

6. 쟁취 ; 여성총과업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2부 | 성평등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 정치에 맞선 운동의 도전과 전략

2부 사회 : 기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토론 1	등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 동의’ 없는 성평등 사회 가능한가
토론 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가만히 있으라” 섹슈얼리티 발화를 금지하라
토론 3	이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나이주의와 보호주의는 청소년을 어떻게 미성숙하게 만드는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
토론 4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변화와 성평등 주체로서의 남성, 남성청(소)년 성교육 활동 경험으로 가능성 짚어보기
토론 5	타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성적 권리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 접근성, 문화, 관점, 태도로 넓히는 활동

‘성적 동의’ 없는 성평등 사회 가능한가¹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들어가며

작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로 활동하면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가 공공도서관에서 검열당하고 성평등 성교육 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들을 확인하며 상담소 현장과는 어떤 연결성이 있을지 고민해볼 기회가 있었다. 당시 충남, 충북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된 도서 퇴출은 보수학부모 단체들이 집요하게 민원을 넣고, 여기에 동조하는 지역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실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양상이었고 이와 같은 패턴은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도 반복되었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배제하라는 민원단체의 주장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주요하게 인용되고 있었다. 보수기독교단체는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성소수자 등이 빠진 2022 국가교육위원회 개정안을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을 국가가 배제하도록 한 결정”으로 해석하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다”고 수정의결한 것을 두고 “강압등으로부터의 보호” 개념으로만 해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화했다. 낙태죄 이후의 재생산권, 젠더에 대한 이해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성전환’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조기 성애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부정), ‘성혁명’ (‘과잉된’ 페미니즘, 인권 교육)으로 번역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였기에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의미화도 반동적 행위라고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냥 넘길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강압등으로부터의 보호’는 현재 성폭력 관련 법체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뿌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폭행과 협박이 극심하고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심문’하고 있는 가부장적 법체계를 ‘잘 설명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저항여부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할 만한 피해자상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많은 여성단체들이 비판해왔고, 비동의강간죄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학부모 민원단체가 이와 같은 법적 상황을 인식하였는지와는 별개로 순결한 피해자상을 벗어난 여성에게 동의를 의심하고 성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한 얼굴들로 보수개신교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우파 정치인들을 새삼스레 확인하는 계기였다.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을 대응하며 붙잡게 되는 고민도 있었다. 사이버성폭력/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거듭하며 ‘불법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온라인 여성혐오-남성문화는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성적 내용이 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구성요건인 현재의 구성요건에 포괄하기 어려운 사례여서 법적으로 포섭될 수 없는 다양한 피해내용은 늘어만 가고 있다.² 이 모든 것을 법으로만 다루자는 것이 운동의 요구였던 적은 한번도 없지만, ‘불법화’ 되어도 모든 것이 비껴나는 현실 앞에 비어있는 ‘사회적인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이수, 유랑과 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2024)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 집담회>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 의적 전환을 위하여 15~21p

아래 토론문은 비동의강간죄와 동의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동의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성평등 정치이자 사회적인 것을 구성해나가는 운동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한 내용이다.

사회적인 것이 사라질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시장’

사회적인 것으로서 성평등 문화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는 시장 혹은 자본으로 대체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법시장화’는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적극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른 것을 변호사 업계가 신속하게 시장화하며 비약적으로 커져 간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을 고발하는 개념이다. 미투운동의 경우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권위주의가 구조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특히 남성사회를 중심으로 성폭력이 욕망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점을 성찰의 기회로 삼지 못했을 때 성평등에 대한 집단적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성폭력 사건의 법시장화는 이러한 윤리성의 빈자리를 성범죄 가해자 전담 법인과 가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감형 컨설팅 업체 등이 속속 채우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준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 현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가해자 전담 법무법인 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공적으로 삭제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여러 이유로 더 빠른 삭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설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불안과 취약성을 고려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다른 폭력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³ 성교육은 또 어떤가. 10대 가해자가 다수 포함된 N번방 사건 등이 공론화되면서 자녀의 성교육을 고민하는 부모가 늘었지만, 학교는 성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 사교육 시장이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⁴

성평등-포괄적 성교육-동료시민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동의여부로 바뀌더라도 동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동의가 무엇인가 해석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역량’에 대한 고민은 처벌되어야 할 동의를 매뉴얼화하여 무한정 늘리는 것, 그래서 비껴나는 사례 없이 전부 다 처벌하라는 요구와 같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저항이 이분법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순히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여성의 삶에서 모순, 모호함, 양가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⁵, 그 공간을 문화운동, 정치적 정의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는 의미이다. 법적 처벌로 피해회복의 방법을 한정하지 않고 부당하고 불평등한 관계와 성적 경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경험을 재해석하는 여정을 페미니즘 지식 및 관계와 접속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나간다는 의미이다. 적극적 합의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소수자들의 성적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의 현장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운동이자 성평등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성적 동의 운동은 관계 안에 작동하는 힘, 권력,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권력분석의 도구이기도 하고 협의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천모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성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성적 실천에서만뿐만 아니라 데이트 장면 등에서도 불평등의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폭력적 경험

3 김보화(2023) 시장으로 간 성폭력.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4 경향신문.2024-08-21 ‘금욕적 성교육’이 만든 ‘성교육 과외’, ‘포괄적 성교육’으로 바뀔 이유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211127001>

5 권김현영(2024) 성폭력피해자 대리인 연구 151p

이후에 그 경험을 소화해내기 위한 해석투쟁의 과정을 지지하는 언어로 교육 현장에 자리하기를 바란다. 나와 상대방의 자율성이 존중되면서 상호협약에 도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밝히면서 동의할 수 있는 권리의 목록이 포괄적 성교육 현장에서 계속 덧붙여졌으면 한다. 성평등 정치이자 포괄적 성교육의 중요 내용으로서 동의는 그 자체로 동료시민을 호명하고 서로의 권리가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사회적인 것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된다.

성적권리로서 동의

마지막으로 ‘동의’ 담론이 어떤 성적 권리 담론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동의가 사회구조나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제약 없는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라고 상정하는 자유주의적인 개념틀 - 진공상태 위에서 행위하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과 문화적 배경 위에서 협상하는 구체적인 사람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동의를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로 쟁점이 이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화적 권리 기반과 맥락 속에서 동의를 위치시켜왔다. 예를 들어 탈가정청소년의 동의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모 동의 없이 노동하고, 집을 얻기 어려운 조건, 성적실천에 있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성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부모가 배척해야 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 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성적 권리의 언어로 동의담론 안에서 주장해왔다.

또한 동의가 권리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야기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다져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조기성애,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의만 있으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는 현재 법정에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의 맥락에서만 다뤄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실시한다.⁶ 이는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위 주체를 전제하고 있으며,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위 주체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모순을 갖게 된다.⁷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존재에게는 권리가 아니라 보호만이 주어져있는 상황에서 ‘동의역량 보장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적 권리로서, 운동으로서 동의담론이 주목해온 일이었다.

6 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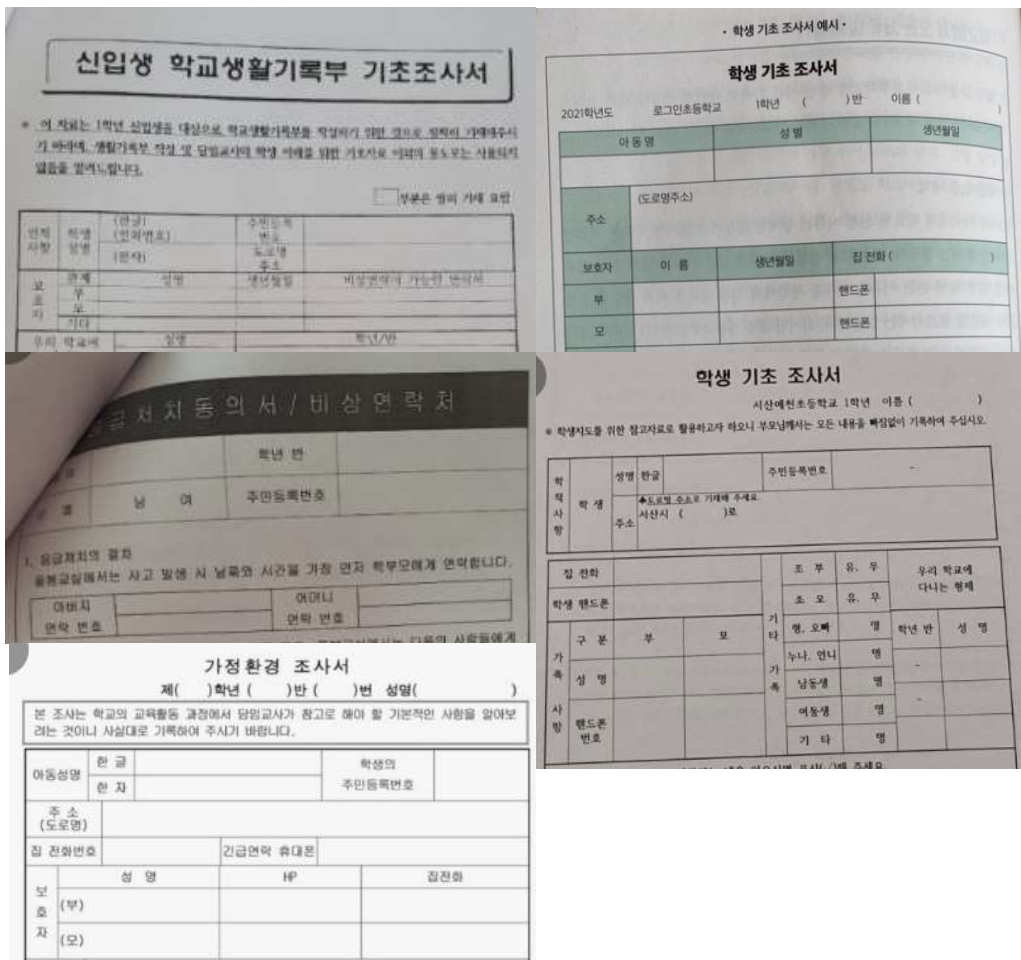
7 박혜진(2009)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 연구 21(3), 229-252

토론 2.

“가만히 있으라” 섹슈얼리티 발화를 금지하라

-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1. 다양한 가족의 파괴, 입학부터



<사진1> 입학제출서류인 학생기초조사서의 실태

입학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받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다. <가정환경조사서>라는 옛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 <학생기초조사서>에는 “부”와 “모”를 지정해서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응급처치동의서 및 비상연락망>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칭할 이유는 더욱 없다. 학교에서 알아야 할 정보는 보호자로도 충분하다. 동시에 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 외에 보호자의 생년월일, 직업은 마치 교실에서 아빠, 엄마의 학력을 묻고, TV, 자동차가 있는지 손을 들어 확인하게 했던 과거의 작태와 비슷한 학교에 불필요한 정보이다.

뿐만 아니다. 입학식 외 학교 내 행사에 참석한 보호자 혹은 양육자들을 흔히 어머님이라고 대표적으로 지칭한다. 행사에 참석한 엄마가 아닌 ‘보호자’들은 머쓱해지는 순간이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1학년 공식 교과 내용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가족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입학 시에는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적인 양식을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 행사에서 다양한 가족을 당연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학교는 교과 과정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 위한 평등”팀에서는 현재 전국 학교의 기초조사서에 양식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학생기초조사서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법률팀”의 자문을 거쳐 학교 공식 행사 및 공식 문서의 언어를 법적 용어에 맞도록 “보호자”, “양육자” 등으로 지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 도서관의 헌법적 지위를 훼손한 성평등도서 퇴출의 실체



<사진 2> 23.09.21 정치하는엄마들 성평등도서 검토



<사진 3> 퇴출당한 성평등 도서의 실태-조기성애화와 동성애와 무관, “제목”만 리스트업했을 것이라 추론

2023년 9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단체 회원들은 실제 퇴출을 강요당한 성평등도서 전체를 열람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의 제안으로 1인당 10권 가량 해당 도서에 대한 평가도 직접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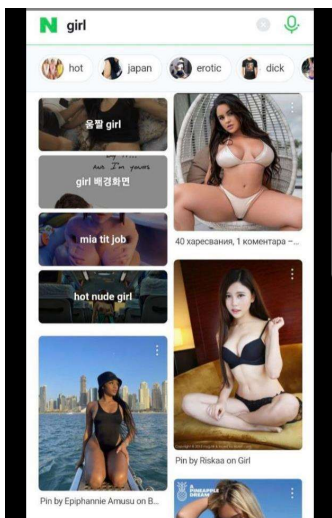
〈사진 4〉 성평등도서 퇴출을 요구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스테디셀러

해당 도서들은 퇴출을 요구당한 동성애 조장, 조기성애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서였으며, 검토한 회원들과 함께 내린 결론은 ‘퇴출을 요구한 단체들은 퇴출리스트의 도서들을 실제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였다. 무작위적으로 제목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만 나열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성 정체성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라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어린이책 스테디셀러인 “긴긴밤”부터 퇴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두 수컷 펭귄-웹보와 치쿠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버려진 알을 품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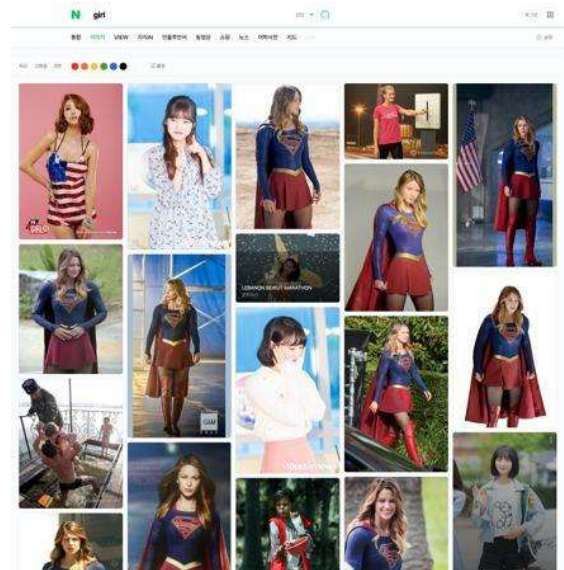
이번 사태로 배우게 된 것은 비이성적인 소수의 끈질긴 행태를 무시하기보다 예의주시하고 정치권이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미디어의 현실(아주 작은 예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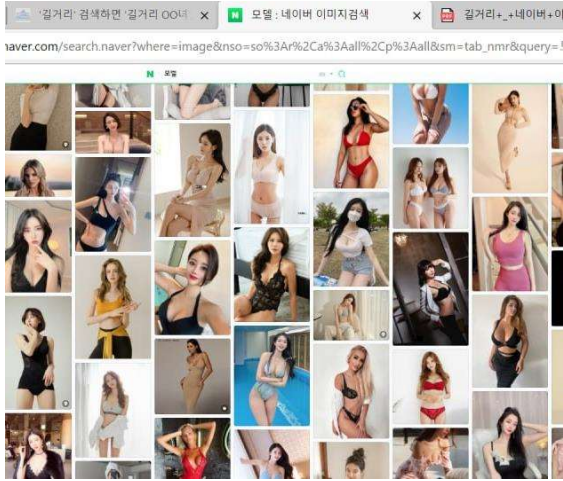
정치하는엄마들은 “미디어감시팀”에서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2022년에 했던 포털사이트 이미지 검색결과와 과정과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네이버 등 대형포털에서 “로그아웃” 상태에서의 이미지 검색결과를 확인했다. 검색어는 “girl, 길거리, 일반인, 모델” 등이었다. 보통의 검색어의 이미지 검색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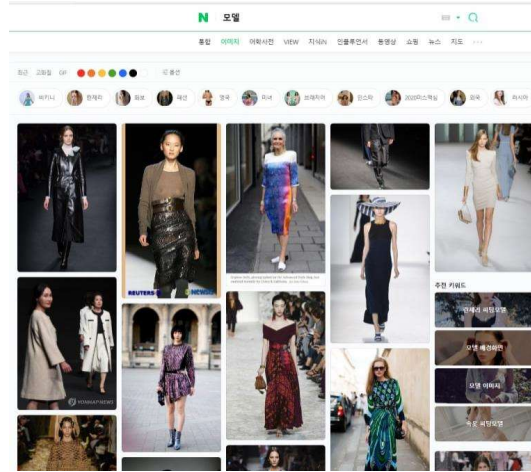
〈사진 5〉 로그아웃 “girl” 이미지 검색 결과



〈사진 6〉 네이버와 미팅 후 “girl” 이미지 검색 결과



<사진 7> 로그아웃 “모델” 이미지검색 결과



<사진 8> 네이버와 미팅 후 “모델” 이미지 검색 결과

이러한 내용을 들고 네이버를 두드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네이버는 네이버 본사에서 미팅을 제안했다. 미팅에서 “길거리, girl, 서양, 일반인, 디스코팡팡” 등 검색결과 이미지를 공유하며 성평등한 이미지 검색결과를 요구했다. 알고리즘으로 자신들은 개입할 수 없다는 등의 처음의 입장과 달리 검색 결과가 바뀌었다.

아주 단적인 예에 불과하며, 모니터링한 검색어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 일상적인 감시 활동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가정과 학교에서 섹슈얼리티를 얘기하고 성평등한 교육을 하는 것이 먼저일까? 검색결과를 매년 확인해야 하는 사회가 맞는 것일까?

4. ‘사교육’으로 성교육하는 현실

2024년 초 1·2학년용을 시작으로 전 학년 적용되며, 초등학교 2026년,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평등’과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시켰다. "코딩이나 AI의 경우 한 반에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배정되는 반면, 성평등 교육은 78만 원이 없어서 발 동 동 구른다."¹

대한민국의 교육은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 섹슈얼리티 발화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 양육자들은 팀을 꾸리고 비용을 각출하여 성교육을 찾아다니는 상황이다. 아무리 경쟁, 입시 교육에 찌든 현실 이라 해도 “성교육”은 아동, 청소년과 양육자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다. 자위, 피임, 섹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억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동, 청소년은 ‘성’을 자극적인 미디어, 특히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고 있다. 여성 착취 포르노 이미지는 웹페이지를 몇 새로고침할 때마다 눈 앞에 나타난다. 예전에는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상이며 유혹은 적극적이다. 반면 현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발화할 없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분위기이다. 이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더욱 말할 수 없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성애 남성 아동,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다른 젠더의 섹슈얼리티를 향한 억압

1 "AI 예산 500만원... 성교육은 78만원 없어 발 동동" 24.09.19. 오마이뉴스 유지영

은 훨씬 무겁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양육자들은 절실하게 성교육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다. 20년 전 생물학적 성교육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교육과정은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섹슈얼리티 발화를 막고 있다.

5. 가만히 있으라 - 스쿨미투,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스쿨미투 사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섹슈얼리티 발화”는 너무 먼 얘기인 듯 싶다. 아주 명백한 성폭력 사건조차 교육 당국조차 정보 은폐를 당연시 여긴다.

2021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2020 학교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재판부는 “학교명을 공개하더라도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건발생 학교명’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숨겨진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18~2023년 9월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포함한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했다. 약 5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명을 포함한 총 112건의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숨겼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는 ‘부분 공개’에 불과했다. 자료에는 여전히 ‘부존재’와 ‘공란’이 가득했다. 관내에서 발행한 스쿨미투 사건 112건 중 가해교사 성별의 28%(31건)가 부존재 처리됐다. 현재 가해교사의 재직 여부는 29%(33건), 수사·재판 진행 상황은 72%(81건)가 공란이었다. 지난 2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수사현황’ 항목을 비공개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에게 요구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6개 항목 중, ‘수사현황’ 1개 항목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3월 6일 항소했다.

학교내 구성원, 교사가 명백한 성폭력에 대해 고발해도 이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행태 역시 노골적이다. 지난해 A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지혜복 선생은 학생들 상담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 교장,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생지부장)에게 보고했다. 선생은 피해학생들이 원하니 대리인 역할만 하게 해달라고 해 그리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들이 생지부장에서부터 피해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듣게 됐다고 밝히면서 피해학생들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생지부장은 피해학생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했을 수 있다며 대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생은 그 자체가 2차 가해이므로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도 생지부장의 재조사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 와중에 피신고자들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심해지고 있었다. 피신고자들은 피해학생들 앞에서 집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노려봤고, 심지어 피해학생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 의자를 발로 세게 걷어차는 폭력행위까지 했다. 피해학생들은 괜히 신고했다며 후회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학교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이에 선생은 교장에게 피해학생들 보호조치 긴급 실시를 요구했으나 교장은 최종 거부했다. 그리고 피신고자들은 이제 선생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선생이 복도를 지나가면 피신고자들 등이 소리를 지르고 조롱했다. 선생은 대단한 충격에 빠졌다. 사태가 악화하자 학교가 긴급히 담임교사 회의를 열었으나 선생은 배제했다. 한편 생지부장은 피해학생들 면담 재조사를 강행했다. 교육부 대응 매뉴얼에는 대면조사시 학부모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했으나 생지부장은 이를 어기고 피해학생들만 불렀다.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그 자리에서 피해사실을 반복하거나 수정했다. 심지어 생지부장은 피해학생들 교실로 찾아가기도 해서 신상이 공개돼 버렸다. 우려했던 심각한 인권침해 연속이었다. 사건은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는 시종 피해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위협에 빠트렸다. 결국 선생은 내부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선생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했고 선생이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학교에 권고했다. 대책수립, 성교육,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해당교사 사과, 재발방지책 등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생을 학교에서 내쫓는 방법을 택했다.²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섹슈얼리티부터 성폭력까지 모든 말하기를 멈추라고 교육당국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말하고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일부 강경보수 기독교인을 비롯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오늘날의 n번방, ‘딤페이크’ 사태와 스토킹, 교제살인, 약탈 비즈니스 등 극으로 치닫는 범죄이다. 이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운동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잃은 가장 중요한 고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섹슈얼리티를 말할 수 있는 토대라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만큼 가정과 학교에서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것부터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다시 리부트할 수 있는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2 매일노동뉴스 24.09.21. “선생님의 투쟁” 류하경 변호사

나이주의와 보호주의는 청소년을 어떻게 미성숙하게 만드는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

- 이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최근 딥페이크 AI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 및 성착취 문제가 대규모로 불거지면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소년을 소위 말하는 유해한 매체나 물질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는 성격의 방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인권운동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해오던 보호주의나 나이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도 누군가는 나이에 따라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받는 세상에서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로, 또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나이주의(Ageism), 보호주의

나이주의와 보호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두 단어의 뜻부터 정리하고 가고자 한다. 먼저, 나이주의 내지는 ‘Ageism’이란, 나이에 따라 사람을 규정하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나이주의적 차별은 당장 오늘의 거리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고 무작정 반말하는 ‘손윗사람’, 청소년이 정치적 발언을 할 때 ‘대견하다’고 평가하거나 반대로 분명 뒤에서 청소년들을 조종하는 배후인 어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 모두 나이주의적 관점이 원인인 문제들이다.

청소년, 즉 어린 사람은 보통 나이주의에 의해 미성숙하거나, 때문지 않은 순수성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보호주의가 등장하고, 나이주의와 결합하면서 힘을 얻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직 순수하고 성숙하지 못하니 유해한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조절할 힘이 없고, 그렇기에 유해물로부터 어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보호주의다.

나이는 자연적인 것일까? 생물이 노화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나이에 따라 성년/미성년을 구분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 제도에 따른 것이다. 즉 나이주의는 자연적인, 자연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회 제도에 기반하여 작동한다. 나이주의 아래에 있는 청소년은 철저히 객체로 변해가며, ‘미래세대’라고 불리고 인식되면서 지금 존재하는 시민이기에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한당한다. 이로 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차별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는 것이 나이주의의 힘이고 영향이다.

‘보호’의 함정

그렇다면 보호주의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더 정확히 하자면, ‘보호’라는 말의 함정은 무엇일까. ‘청소년보호법’ 등 우리가 보호라고 말하는 것들의 실체는 사실 통제와 격리다. 술이 위험하다며 청소년이 술에 손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시다.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구조 속에서 폭력과 차별은 시작된다.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관계 속에서는 평등하지 않은 수직적 권력관계가 생성된다. 대표적으로 보호하는 양육자와 보호받는 어린이·청소년의 관계가 그러한데, ‘보호받는’ 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말, 태도, 행동을 ‘보호하는’ 양육자에게 통제당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런 관계 속에서 청소년은 언제나 보호받는 사람으로, 본래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미성숙한 자들로 머물게 된다.

보호의 두 번째 문제는 소위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의 근본적 원인을 은폐한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바깥에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어린이를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옳은 조치일까? 그전에 어린이가 바깥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생각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닐까?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어린이의 행동만을 제한하는 것은 엉뚱하고 일시적인 대안일 뿐이다. 게다가 만약 어린이가 통제를 어기고 행동할 경우, 혼나는 것은 이상하게도 어린이다. 이렇듯 보호는 그 이름으로 차별과 폭력을 가하고 위험한 것의 근본적 원인을 가려버린다.

앞서 말한 딥페이크 AI 성폭력 및 성착취 사태로 돌아가자면, 이번 사태와 같은 성범죄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은 나이주의와 보호주의 또한 대폭 강화한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과 분리시킬 때 청소년은 객체화되며, 청소년을 제외한 외력에 의해서 동의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논의된다. 이러한 위치의 청소년은 아무런 권리도 지니지 못하고 그저 다시 나이에 따른 미성숙하고 순수한 존재로 규정지어질 뿐이다.

이와 같은 보호는 필요하지 않다.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이 정해지는 이상 보호는 통제일 뿐이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충분히 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흔히 ‘그럼 사회적 안전망을 없애고 위험한 요소와 사회적 약자들이 한데 섞이도록 놓아두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질문을 듣는다. 위험한 요소에 대한 해결책은 아까도 말했듯 우리가 분석하고 고려해 봐야 할 대상이다. 보호주의 비판의 핵심에는 왜 보호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권리를 누군가에게서 뺏어버리라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여전히 나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괄적 성교육

최근의 문제가 위와 같다면, 주요한 대안으로 꼽히는 성평등한 성교육의 로드맵은 어떻게? 성소수자조차 포괄하지 못하는 현재의 성교육에 비한다면야 훨씬 낫겠지만, 성평등한 성교육의 대표적 모델인 포괄적 성교육(CSE)을 보면 여전히 청소년인권운동에서 비판하고 있는 나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선명하다.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나이에 따라 어떠한 발달 단계를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능력을 요구하며 교육한다는 것이다.

기초학력과 같이 특정 연령에 따라 요구받는 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구성된다는 것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 성교육 모델에서도 청소년은 여전히 객체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미성숙한 존재로 남게 된다.

청소년인권운동이 나이주의와 보호주의를 비판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여전히 성평등하다고 여겨지는 포괄적 성교육조차 나이주의를 당연시하면서 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다시 짚어야 할까? 오히려 나이주의라는 말을 이용하여 나이주의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는 다른 운동들을 종종 목격할 때 청소년인권운동이 마치 청소년의 위치처럼 주변화되고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운동 사회에서부터 청소년인권운동이 다른 운동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찾아오고, 성평등한 사회에서 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변화와 성평등 주체로서의 남성, 남성청(소)년 성교육 활동 경험으로 가능성 짚어보기

•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1. 시작하며

얼마 전, 평소 존경하는 인권 활동가 한 분과 회의 빙자 술 한잔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오랜만의 수다에 푹 빠져들던 중, 이야기 주제가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등에 이르렀을 때, 한 잔을 털어 넣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가 몽땅 죽어야 해요

이 자조 섞인 말에 잠시 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020년 많은 이들이 ‘N번방 사건’이라 불렀던 텔레그램 기반 성 착취 범행이 드러났을 때, 온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만 4년도 더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평등 담론에 있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아니 범죄의 기술성과 광범위성 등에서 볼 때 오히려 더욱 후퇴했다 해도 과한 비판이 아닐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SNS에서 당장 사진 내려’ 식의 단속이 피해자 중 절대다수인 십대 여학생에게 행하고 있는 학교 현장 후속 조치의 거의 전부이고, 최근 교육감 자리가 비워진 모 교육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기본적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디지털 성범죄 국가가 된 것일까? 그리고 그 중심에 남성청(소)년이 자리하게 된 것일까?

2. 괴물을 양산하는 사회

사실, 이 같은 범죄는 특정 범죄집단이나 독특한 소수의 괴물이 벌이는 행위가 아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와 비하, 성적 대상화는 이미 상상 가능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학교학년이 되면 벌써 난무하기 시작하는 남학생들의 소위 ‘섹드립’ 때문에 담임교사가 학교 가는 게 두렵다는 하소연이 넘쳐난다. 상황이 이럼에도 성교육, 아니 교육 현장 전반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하루아침에 정책과 조례가 폐기되기 일쑤이다. 또한 스쿨 미투 이후 여전히 대다수 학교 현장은 외모 평가, 고정 성역할 주입 등의 문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고 변화 시켜야 할 교사 상당수의 성인지 감수성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다. 어디 그뿐일까? 상남자, 남자다움, 남자 남자 남자... 대중 매체와 유튜브에서 범람하는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의 홍수 속에서 남성청(소)년이 성평등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

능한 일이거나 할까? 남성청(소)년들의 돌출된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냉소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낸 이 사회의 판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3. 나 / 우리의 위치 인식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린 광장의 폐허를 돌아보며 세상이 망했다고 한탄하면서 시류에 떠 밀려가는 것은 언제나 쉽다. 무엇보다 어렵지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은 당장 잡아먹어도 부족할 돼지를 부득부득 먹이고 키워내는 일이다.” - 손희정, <다시, 쓰는, 세계> 233쪽

발제자에게는 80이 넘는 노모(老母)가 계시다. 여러 번의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겪은 어머니는 전동휠체어 없이 외부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다. 어머니에게는 십여 개의 계단은 절대 오를 수 없는 벽으로 가히 에베레스트산에 비견 할만하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다면 그 안에 속한 남성청(소)년에게 성평등, 혹은 포괄적 성인지 감수성 등과 같은 과제는 십여 개 계단 앞에 선 발제자의 어머니와 같이 난해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미셸 푸코가 ‘권력은 도처에 있다’라 했던가?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구상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혹시 ‘너(남성청(소)년)는 왜 얼마 되지도 않는 계단 아래에서 그 모양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 같은 내적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민과 문제 제기가 자칫 계단 위에 서서 아래에 있는 이를 내려다보며 행하는 비판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판을 변화시키는 여정에 있어 지금의 남성청(소)년은 분명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동지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도드라지는 그들의 특성에 절망하거나 때로 분노하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다.

4. 결국 희망은 현장에 있다!

“한 사람의 남성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가부장적 경계를 용감히 넘을 때,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이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한다.” - 벨 훅스

부족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시간을 잠시 거슬러 2020년 초 소위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도배될 당시로 가보고자 한다. 당시 ‘조찬모임’이라는 이름 하에 성평등운동 활동가, 성교육 전문가들이 월 1회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구성원들에게 당시의 사건은 지금의 상황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무기력함, 절망과 같은 감정 속에서 모두 말을 아끼고 있을 때, 누군가 말했다.

뭔가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후 모임은 남성청(소)년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다. 공부를 이어가며 깨달았던 건 ‘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우리도 어떤 면에서 남성청(소)년은 어떠하다라는 생각 속에 대상화하는 면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후 조찬모임의 결정으로 남성청(소)년 연구모임이 시작되었고, 그에 기반해 중학교 1-2학년 남성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강의안을 개발한 후, 서울지역의 남자중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연구모임은 남성청(소)년 성교육 연구회로, 다시 남성청(소)년성교육 연구소 준비위원회로 변화했다.

남자중학교, 가해자 교육, 소그룹 성교육 등 다양한 현장을 통해 만난 남성청(소)년들은 놀랍게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엔 장난이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래 단위에서 우월한 남자로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성적 불평등 행위와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지난 후, 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감탄사와 ‘그게 뭔지 잘 몰랐다’였다.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었던 불평등적 행동에 대해, 혹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남성성에 대해 참여자들은 ‘아!’ 하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또 페미니즘에 대해, 왜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남성이 고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 많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을 보인다. 물론 군 복무, 여가부 등 예상되는 주제나 무척 창의적인 질문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참여자와 함께 논의하거나 질문의 방향을 전환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대부분 유의미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 적어도 개인적인 경험상 혐오적 입장을 끝까지 거두지 않는 이는 ‘어른’들이다.

사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교육 현장이 늘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를 그들에게 돌리는 건 가장 편한 대응일 순 있지만, 결코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 꾸준히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 종래의 남성과 남성성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시류와 정치적 지세에 따라 출렁이는 성교육 현장의 안정적 교육여건조성을 위해 성교육의 정규교과반영 추진은 필수적인 운동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학기 끝날 때나 할 것 없을 때 진행되는 특별교육의 한계를 넘기 위해 이른바 ‘교과 통합형 포괄적 성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도 정책 변경 전 학교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참여자뿐 아니라 매개자(교사), 양육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돕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여 남성청(소)년이 속한 삶의 자리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와 성평등 주체로서의 남성을 세우고 응원하는 역할을 운동영역과 교육 현장 곳곳에서 벌여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

성적 권리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접근성, 문화, 관점, 태도로 넓히는 활동1

• 타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1. 성적권리 운동을 해나가는 것

성적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은 인권, 반차별 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성적 권리는 젠더 정의와 관련해서, 혹은 독립적으로 언제나 도전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그 이유는 인권의 보편성을 획득했는지 의심받으며 모두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소수자 혹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것처럼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처지에 놓은 ‘권리’들은 언제나 외쳐왔다. “여성인권은 인권입니다” “성소수자 인권도 인권입니다”. 또한 이런 처지에 있는 권리들은 다른 권리들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성적권리를 옹호하면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하면 여성의 권리 침해 우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오늘 모인 우리들은 걱정이 많다. 권리의 관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옹호할 수록 함께 뒷받침 되는 것이라고, 권리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이 말들이 계속 힘이 없을 것 같다. 성적 권리도 다른 권리만큼 중요하다, 성적 권리 없이 다른 권리도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넘어서 혹은 그런 주장을 정말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차별과 억압이 어떻게 서로를 사로잡으면서 엮여있는지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그런 우려가 개인들의 무지의 차원으로 축소되지 않고, 억압의 논리가 생산되고 강화되는 권력의 핵심에 가닿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항문성교에 대한 혐오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한 연결이 어떻게 인권과 반차별의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우익보수의 정치적인 기획인지, 이에 대항하는 방법은 왜 탈식민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권운동이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체제에 대항하고, 국가가 행하는 차별과 폭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꾸어나가며, 그 방법이 합법/불법의 경계를 질문하면서 기존의 권리에 대한 개념과 기준, 질서 자체를 바꾸어나가는 운동이라고 할때 인권운동으로서 성적 권리 운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적인 억압을 조장하는 형법상 성폭속 개념에 따라 범죄화된 존재와 행위로부터 성적 권리 운동은 시작한다. 또한 모성과 정조이데올로기로 성을 통제함으로써 젠더 위계를 유지했고, 공중위생을 이유로 ‘문

1 추최측에서 제안해주신 제목을 수정하지 않았지만 발제문에서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성적 권리의 범위나 권리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생각해보자는 제안으로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란'함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신체와 성행위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했다.

원치 않았던 임신의 당사자가 겪어야 했던 일련의 고통은 낙태죄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떨어질 수 없다. 게다가 낙태죄는 혼인상황, 경제적 상황, 나이,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국적 등의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른 효과를 발휘했고, 실제로는 혼외성관계를 한 여성, 자율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성적 실천을 결정한 여성에 대해 처벌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국가는 성폭속을 규제하기 위해서 금전거래가 매개된 성관계를 금지하고(형법 제242조) 음화제작과 반포를 금지하며(형법 제243, 244조) 공연음란을 감시한다(형법 제245조). 정조이데올로기와 모성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젠더화된 폭력이 생산되는 구조를 사실상 국가가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부계혈통과 성폭속 유지를 위해서 금지해왔던 유구한 역사속에서 균형법상 추행죄(균형법 제92조6)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기능하는 것과 연결되며,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매개행위가 공중보건이 아니라 문란한 성적 행위로 인해 감염병에 걸린 이들의 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작용했다(에이즈예방법 제19조). 또한 장애인, 부랑인, 흡리스, 미혼모, 성노동자를 수용하고 감금해왔던 역사는 성적 권리를 박탈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성적권리의 침해는 오랜 역사속에서 국가가 행해왔던 처벌과 인권침해의 모습으로 소수자들의 몸에 켜켜이 쌓여왔다. 이러한 억압의 역사와 장치들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부당한 경험의 출처와 원인을 이해하며 자신을 탓하지 않으면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²

또한 국가의 인구와 성통제 정책이 자본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생산성과 정상성의 가치가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의 지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새기지 않을 수 없다. 성적 권리는 때로 사법적 판단 속에서 자본주의 시스템과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적 권리 운동이 자본주의 체제와 불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계기에서는 (“사회적, 비용적 큰 부담을 초래”, “건전한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도전” 등등의 언어들)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³ 건강을 정상성의 담론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이윤과 연결하려는 의료산업은 의료시스템, 전문가집단의 권력과 연합하여 성건강과 관련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기존의 의료시스템에서 배제되었거나 병리화되었던 임신중지, 트랜지션, HIV/AIDS를 비롯한 성매개감염 예방과 치료 등의 이슈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를 통한 폭리, 폭리로 인한 생명권 침해에 대항한다. 동시에 초국적 제약회사는 공익사업의 형식으로 쿼어, 피엘 공동체에게 자금을 낸다. 이는 잠재적인 소비자를 발굴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치로 내세운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핑크워싱은 정상화된 치유담론을 생산하고 이용하면서도 그것을 소비자의 능력으로 환원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권리화를 파괴한다. 재생산 정의 운동에서 의료현장을 바꾸어나 가려고 노력하는 의도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의료산업복합체가 정상성을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정상화된 건강(“에이즈는 가정을 파괴하니까” “여성의 불감증은 병”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치료해야 할 병이니까”)을 위해서 공공의 자원을 식민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투쟁이 성적 권리 운동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적 권리 운동은 성건강을 탈병리화하고 자본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전문가주의에 도전하며 공공자원을 탈식민화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연결된다.

2 나영정/타리, ‘동의, 합의, 욕망 사이 - 소수자의 즐거움을 바라지 않는 사회에 저항하는 성교육’, 세이 이슈페이퍼 <https://srhr.kr/issuepapers/?q=YToyOntzOjE5O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4008550&t=board>

3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나영정, 나영정, ‘국가권력과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항하는 섹슈얼리티’, [인권운동] 3호, 2021. <https://hrmovement.tistory.com/7>

2. 차별, 강요, 폭력, 낙인의 자리가 성적 권리 운동의 현장

1)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서 저항의 현장을 만들기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서 세어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성노동자, 청소년, 중노년 여성 등과 만나 각자의 그룹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질문하고, 이들이 꺼내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성교육에서 배제되었다. 청소년을 성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성교육은 이들 전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성교육 시간에 성소수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오히려 교사의 혐오발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공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농인학교에서조차 수어를 하지 못하는 교사가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으로 성교육을 대신하는 경우도 일쑤였다. 법적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성건강과 성적즐거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소외된 집단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세어가 이들과 함께 성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는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다. 이들은 현행 법제도와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서 성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금지당하거나 사회적인 낙인을 받고 있다. 소수자의 경험이 성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은 단지 수가 적거나 사소한 문제라서가 아니라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가치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취약한 그룹을 단지 ‘특별한 보호’ 혹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만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이 차별과 낙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도전이 가능하지 않으면, 각자가 경험해온 경험이 이러한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저 각자의 능력과 정보, 기회의 부족으로만 여기기 쉽다. 따라서 소수자를 위한 성교육은 바로 성적 권리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 자신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적 즐거움, 만족감, 쾌감은 어떤 것일까. 오르가즘이라는 말로 수렴되기엔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자위를 통한 즐거움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고, 신체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만족이 다르다고 느끼기도 한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려지는 신체적인 매커니즘 또한 성별 이분법에 근거하거나 성기중심적 정상성에 기댄 설명이 많아서 많은 이들이 이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나이, 장애, 질병, 트랜지션 등으로 인해서 각자가 느끼는 쾌감의 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세어는 성교육을 통해서 각자가 신체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느낌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편견이나 낙인이 즐거움을 찾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대안적인 관점이 담긴 정보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즐거움을 얻기 어려운 이유의 핵심에는 사회가 소수자들이 성적 즐거움을 얻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에 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 정보, 비용, 장소 등을 마련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타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어야 하는 비용과 시간 등의 자원 또한 필요하다. 성관

계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는 사회적인 차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며 손해를 복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바로 이러한 점이 자원이 부족하고 차별받는 이들이 성적 즐거움을 포기하도록 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서 낙인과 또다른 차별에 노출되어 고통을 유발한다.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로 성적 즐거움을 고민하고, 성적권리가 인권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⁴

2) 색다른 토크하세어를 통해 현장을 연결하기

세어와 색다른의원이 함께한 <색다른토크하세어>는 세어가 그리는 비전,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누리며, 충분한 정보와 평등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계클리닉과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2023년 총 3회에 걸쳐서 1. “다양한 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질과 자궁이야기”, 2. “성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3. “항문섹스도 인권이다!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집 발간을 통해서 보건의로 환경과 법·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지적했다.

색다른토크하세어를 기획하면서 자궁건강, 항문섹스, 성매개감염이라는 주제가 어떤 이들, 어떤 행위, 어떤 장소와 연관되는지를 드러내면서 그 자체로 이러한 주제에 연결된 낙인에 저항하려고 했고 패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매개되는지 드러내고 싶었다.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성건강 이슈를 다루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며, 법정책과 의료현장이 전제해왔던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 어떤 것들과 더 연결되어야 하는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양한 몸 경험이 말하는 질과 자궁건강을 짚으면서 장애여성이 경험했던 임신출산의 경험이 어떻게 비장애중심성과 우생학적 유산으로 인해서 차별받았는지 절실히 느꼈던 경험, 노동환경에 의해서 몸을 돌볼 여유없이 자궁관련 질병을 가졌는데 자본화된 의료시장에 의해서 다시한번 소외되고 착취당했던 경험, 환자에게 선택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질형성 수술과 관련된 방법, 크기, 의미에 의해서 소외되고 후속적인 조치를 하면서 트랜스젠더 성확정 수술과 관련된 경험을 돌아보았던 경험, 부치 여성으로서 자궁의 의미를 질문해볼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건강을 돌보기도 어렵고 생식능력이나 책임과 다른 의미를 자신의 몸에 부여하는 것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등을 나누었다. 질과 자궁을 둘러싼 건강, 성적 즐거움, 정체성과 신체 변화/변형의 문제는 질과 자궁을 가진 몸-마음이 놓인 자리에 따라 천차만별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 경험은 차별, 강요, 폭력, 낙인이 생성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증언하는 귀중한 지식이며 차별, 강요, 폭력, 낙인의 원인이 장애, 성적체성, 직업을 선택한 것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지배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성매개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자리에는 HIV감염인으로서, 약물사용자로서, 성노동자로서, 십대 여성으로서, 캐주얼한 섹스를 하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었다. 그 관계성은 법 제도가 맺은 억압적 관계이기도 하고, 자발성과 호의로 만난 성적 파트너일 수도 있으며, 금전과 약물이 매개된 파트너와의 관계이기도 하다. 성매개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은 이 관계들과 매개되기 때문에 보건정책이나 의료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성매개감염으로 인해서 처벌받고, 직장과 학교

4 나영정/타리, 위의 글.

에서 쫓겨나고, 협박을 당한다. 또한 약물과 성노동에 대한 범죄화는 성매개감염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정의롭게 설정되었는지 질문함으로써 차별, 강요, 폭력, 낙인을 대처하는 운동의 전략 또한 비껴 수 있다. 따라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운동에게도 필요하다. 성적 권리가 필요한, 성적 권리 운동이 피어나는 현장을 주목하고, 현장들 사이에 관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동료가 보이고, 지배체제의 전략이 확연히 드러난다.

(항문 섹스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

3) 임신중지를 권리로 만드는 것은 성적 권리와 옹호와 연결

재생산 정의 운동은 낙태죄가 인구정책 기조에 반하여 우생학적 기조에 맞지 않는 생명은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혼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효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낙태죄 폐지 투쟁을 통해서 밝혀냈다. 따라서 재생산 정의운동은 임신,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장애와 빈곤에 대한 낙인과 처벌, 생산성과 정상성의 가치로 기획되는 인구정책, 이주민과 성소수자의 삶을 도구화하거나 도구화되지 않으면 버려려고 하는 지배체제와 연결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이들은 성적 권리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임신중지가 권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비범죄화를 자리잡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사각지대로 남겨지는 곳은 성적 권리가 필요한 현장일 것이다. 임신중지를 둘러싼 차별, 강요, 폭력, 낙인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그 곳과 겹쳐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임신중지가 선택이 되지 못하는 시공간이 성적 권리가 침해되는 현장임을 자각하면서 계속해서 두가지 운동을 연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HIV여성/이주민/장애인의 삶과 만나는 것

HIV여성/이주민/장애인의 삶은 한국사회의 기생과 기지촌 유흥업소 종사자의 몸을 통해 '성병'을 통제해왔던 역사, 유흥업소 종사자와 게이/레즈비언의 몸을 통해서 에이즈를 통제해왔던 역사, 이주민의 몸을 인구정책의 필요에 따라 분할하고 생산력과 생식력으로 구분하여 도구화하며 치료받을 권리도 차등화해왔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다. 여성과 이주민, 장애인이 경험하는 HIV바이러스와 에이즈라는 질병이 단일한 질병의 경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부터 시작된다. 에이즈라는 질병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장소와 관계, 사회로부터 배제를, 한국사회로부터 추방하는 효과가 지속되는 한 에이즈에 대한 예방정책 조차 징벌적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질병을 이러한 의미와 효과로 잡아두게 하는 이유를 캐묻고 그 질문으로부터 줄줄이 달려나오는 차별, 강요, 폭력, 낙인의 양상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구조를 파악해야 HIV여성/이주민/장애인의 삶과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전지구적으로 에이즈 운동이 해왔던 성적 낙인에 대항하기, 문란함의 의미를 변혁적으로 바꾸기, 안전한 성관계의 의미와 방법을 재창조하기, 감염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정의로운 방식을 요구하기, 감염병을 이유로 국경을 통제하고 이주민의 몸을 분할하는 것이 가진 부정의에 저항하기 등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분명한 성적 권리 운동의 역할이다.

5) 팔레스타인 퀴어 운동과 연대하면서 비인간화에 저항하기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가자지구 초토화를 목격하고 있다. 이는 1948년 나크바로 시작된 정착민 식민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다. 정착민 식민주의는 선주민의 존재와 역사,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지우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여성의 재생산을 지난 1년과 같은 대학살의 시기가 아닐때에도 언제나 통제하고 공격해왔다. 정착민 식민주의가 재생산을 직접적으로 통제해왔던 역사는 북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북미의 선주민 페미니스트들은 정착민 식민주의에 재생산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강조해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주민의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민지배의 통치 전략에는 선주민 여성들이 정착자의 아이를 가지면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지만 그 아이의 선주민성을 부인하는 방식, 선주민의 아이를 강제로 기숙학교로 보내어 선주민 고유의 방식으로 양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착자의 아이를 출산한 선주민 여성들에게 부역자 프레임에 씌우는 것은 물론, 전쟁과 제노사이드를 논할 때 여성과 아동의 경험이 부차화되는 것에 경종을 울린다.”⁵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학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인간-동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함께 작동한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인권국가라고 칭하고 핑크 워싱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비인간화하며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널리알려졌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 사회에서 팔레스타인 퀴어와 연대하는 의미를 복잡하게, 더욱 정치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퀴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서 팔레스타인이 재현되고 그것을 이유로 이스라엘의 식민지배와 인종청소가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연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슬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게 한다. 성소수자 무슬림 난민은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무슬림 이주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성적 권리를 실천하면서 노동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더이상 퀴어 운동과 무슬림 이주민 운동이 별개일 수 없고 성적 권리 운동을 해나가는 동료로 어떻게 만날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따라서 식민지배가 만들어낸 (성적) 비인간화를 직면하지 않는 성적 권리 운동은 불가능하다.

3.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배치를 바꾸는 것

접근성은 모두를 위한 권리를 만들어나가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떤 권리에 누가 어떤 이유로 배제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현장에 누가 오기를 기대하는가, 어떤 운동은 누구를 초대하는가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역과 번역을 제공하는 것,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 비용과 자원의 불균형 함을 인식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것,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한 속도와 정도를 인식하면서 조정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성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공공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월, [후기] 재생산정의X팔레스타인 세미나,
<https://srhr.kr/announcements/?q=YToyOntzOjEyOjRlZXI3b3JkX3R5cGUlO3M6MzoiYWxsIjtzOjQ6InBhZ2Z2UiO2k6MjIt9&bmode=view&idx=93985192&t=board>

이러한 책임의 부과와 이행의 강제가 정당한 것은 접근성이 복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접근성의 필요는 지배질서가 만든 분할과 배제를 통해서 생겨난다. 비장애인중심성, 선주민중심성, 이성애시스젠더중심성, 성인중심성이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특별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인구로 구성해낸다. 따라서 정치적인 접근가능성은 특별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성과 중심성을 해체해나가면서 권한과 역량을 새롭게 분배하는 것이다. 접근성은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을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치 자체를 다시하는 것이다. 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이 지하실에 있었나를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사다리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성적 권리에 있어서 권리의 우선성을, 보편성을 질문하지 않으면 성적 권리로 가는 특별한 사다리를 시혜적으로 놓거나 치우는 현재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

4. 당신의 금지를 우리의 금지로, 탈식민적 방법론

금지를 금지로 만들자는 것은 단지 미러링 같은 전략이 아니다. 대항 말하기는 역사와 구조가 켜켜이 쌓인 몸-마음이 발화할 때 힘을 가진다. 금지의 역사와 구조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지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발명하고 갱신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성적 권리를 권리로 만드는 방식과 관련된다. 성적 즐거움을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즐거움을 만드는 방식과 관련된다. 가부장제가 누리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누리겠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의 불평등체제와 기후위기를 만든 제국주의적 질서가 제도화된 법제도의 논리에도 켜켜이 쌓여있다. 일제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권리를 서구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지배체제에 종속시키려는 지금의 식민화 방식에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 투쟁이 복잡하고 여러가지 차원으로 접근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규정된다. 권리가 금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체제의 시혜나 허용이 아니라 차별, 강요, 폭력, 낙인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는 집단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정조 이데올로기나 모성 이데올로기처럼 성폭속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성행동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도전이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기 위한 조건, 성적 권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성평등 도서검열과 성소수자 억압의 논리, 댁페이크 사태에 대한 무책임은 성폭속 이데올로기와 단단히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배 체제는 합법의 틀을 늘려나가고자 하지만 진정하게 금지를 넘겨주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길들이고 피해자 사이의 위계와 배제를 만드는 방식의 제도가 어떻게 성적 차별, 강요, 폭력, 낙인을 재생산하는지 목도해왔다. 여타의 변혁적인 운동과 마찬가지로 성적 권리를 위한 운동도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를 반복하거나 재생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억압받는 사람들의 생존과 접근성, 지속가능성과 역량과 사회적 관계성을 추동하는 해방의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그것을 위해서 범죄화되고 감금되며 비인간화된 자리가 금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주장하고 싶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3부 |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는 지역 성평등 정치 기획하기

3부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제 1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성평등 정치 실현을 위한 차제연 활동 소개와 계획
토론 1	이상미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충남 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 폐기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응 경험 속에서 지역 내 성평등 정치를 위한 지역사회/지역운동의 과제 나누기
토론 2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지역-성평등-정치
토론 3	써니(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간다

발제 1.

성평등 정치 실현을 위한 차제연 활동 소개와 계획

-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성평등이 정치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과 페미니즘을 외면하는 국회까지, 성평등이 이 사회의 성취이자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지향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치권이 나서서 흔드는 상황이다. 이렇듯 정치가 퇴행하는 사이 차별과 폭력은 일상으로 한발짝 더 다가왔다. 디지털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최근 밝혀진 친밀한 관계를 대상으로 벌어진 대규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성평등을 부정하는 정치가 불러온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의 장에서 성평등을 부정하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도 총체적인 후퇴는 진행되고 있다.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성차별적 인식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지자체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성평등 조례 등을 폐기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역의 인구 소멸을 걱정한다며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정책이 나오고, 성차별적 성교육 표준안 고치랬더니 성교육 표준안을 아예 폐지한 채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여기에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사태부터 충남, 경기 지역에서의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까지 이어졌다. 보수기독교 조직이 학부모 단체로 탈바꿈하여 지역의 학교, 공공도서관에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폐기하라는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 교육청이 이를 받아 도서를 검열하고 폐기 처리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인사, 제도, 정책, 공공의 공간에서까지 성평등의 가치가 부정되고 밀려나는 장면들은 그저 개별적인 상황으로만 볼 수 없는 현재를 드러낸다. 차별을 조장해온 정치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총체적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정치가 불러오는 실패에 맞서며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 차별금지 원칙을 흔드는 정부와 여당에 반차별 운동의 원칙을 강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주당은 성평등정치는커녕 자신들의 정치 공학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이들이 학생인권법 발의 과정에서 보여주듯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맞서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지만 논란은 피해야 한다고 차별 사유에 또다시 성적지향은 삭제하고 가지는 방식을 제안한다. 다행히 청소년인권 운동의 항의로 해당 제안은 철회되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은 늘 모두를 위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되기보다 어디까지 타협할 것인가로 쉽게 귀결되어왔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리를 배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틀을 넘어서는 정치적 힘을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수 기독교 세력의 민원에 가로막힌 권리를 타협하는 정치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치의 힘을 지역에서부터 모아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평등 정치’라는 말만으로 기존 정치와 사회에 개입하고 변화를 만드는 힘을 당장 모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성평등 사회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만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과 섹슈얼리티는 아주 사적인 영역으로만 다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호명될 때는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되기 일수였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성적 권리를 누린다는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치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아주 약한 토대위에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다. 지역에서부터 성평등 정치의 힘을 모아나가는 일은 성적 권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거부함과 동시에 우리의 성평등 정치의 내용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과정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성적권리의 내용을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함께 채워나가고 요구할 때 세력화도, 정치에 개입하는 일도 가능해질 수 있다. 차제연은 이를 위해 성평등 도서 검열 대응을 중심으로 지역 활동을 포함하여 성평등 정치를 조직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함께 성평등 정치가 지역에서부터 개입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 나누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1. 지역 대응 활동

○ 충청남도 성평등 도서 대응 현황

2023년 7월 | 충남도의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민규 의원(국민의힘)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문제 삼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를 도내 36개 도서관에서 열람제한 조치했다고 밝힘.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김일수 충남부교육감 역시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짚으며 논의 및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이후 충청남도는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지정취소 도서(6종) 및 충청남도의회 긴급현안질의 관련 도서(4종)까지 총 10종에 대해 별도로 비치했으며, 일부 성교육 도서는 보호자 동의 하에 함께 볼 수 있도록 별도 비치하며 검열과 열람 제한 등을 실행.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이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학생, 양육자, 사서, 저자를 포함한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하지만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인권위 진정의 결과가 나와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2024년 8월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 시도.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심의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유해도서를 지정, 제한하는 내용. 국민의힘 이상근 도의원의 대표발의 되었다가 8월 말 ‘공주책읽는여성행동’의 문제제기와 보도를 통해 폐기. 하지만 해당 도의원은 다음 회기에 다시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둔 상황.

○ 경기도 성평등 도서 대응 현황

2023년 9월 | ‘보건학문 & 인권연구소’ (보안인)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유해도서 분리제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세종시시립도서관에서는 민원 이후 유해도서로 자체 판단해 보존서로 이동시켰다는 사례도 함께 제시함. 이후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과)이 각 교육지청에, 각 교육지청이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민원 공문을 그대로 전달하며 ‘유해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조치하도록 함. 2024년 5월,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1년(2023.3~2024.2) 동안 경기도 내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총 2,528권(517종)의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교육권, 교사의 노동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고어린이·청소년, 교사, 학부모 및 시민들을 포함한 572명의 공동진정인과 함께 국가인권위 진정.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생각했던 것보다 폐기된 도서 양이 많아서 그점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학교에서 자체 판단한 내용”이라며 책임을 부정.

○ 충남, 경기 외에도 대구 수성구에서도 ‘도서관 도서 관리 강화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퀴어(성소수자)문화축제 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개신교 학부모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서관에 비치된 음란 유해 도서를 폐기해 달라'는 민원을 반영하려함. 인천, 부천 등의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던 성평등 도서 검열과 열람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평등 도서 검열/폐기의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지역 단위 간의 연대를 통한 대응 활동을 이어가보자. 성평등을 다루지 않는 지역/정치가 만 들고 있는 실패를 확인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 의제를 여성의제 혹은 소수자의 의제로만 국한하여 이해하는 방식이 사회의 총체적 실패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기독교 학부모 단체의 이슈로만 치부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문제 의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마다 공통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도서 검열의 방식을 확인하고, 현재 대응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관 조례 제/개정 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막아내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으로 만들며 공동 대응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함께 진행하자. 성평등 도서 대응이 지역 현안 대응이자 지역 단위들이 함께 모여 싸우는 계기-조직화의 경로가 될 수 있도록 활동 고민을 이어가자.

2. 자유롭고 평등한 성적권리 말하기

지역 현안 대응만이 아니라 성평등 정치가 지향을 모아내기 위한 기획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섹슈얼리티를 말해본 적 없는 사회에서 성적 주체로서 청소년, 평등하고 자유로운 성적 즐거움, 항문섹스 등과 같은 주제는 물론 다양한 몸들이 모여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장을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통제가 아닌 성적권리와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말할 수 있을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자. 지방/정부의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이후 어떤 성평등 가치를 내세우고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역 사회의 성원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평등 도서 기획전, 성교안 만들기, 성평등지역정치 선언 등의 기획을 지역 운동사회와 함께 모색해보면 어떨까. 이 과정에서 지역의 청소년, 소수자, 여성운동과 같은 주체들은 물론 노동, 돌봄, 공공성과 같은 다양한 문제의식과 접속시킴에 성평등 정치를 펼치는 장이 지닌 확장성을 확인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성평등이라는 키워드가 대중을 모으고 교류할 수 있도록 거점을 제공하는 정치의 언어로서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3. 성평등을 지역 정치의 의제로 만들기 위한 정책활동

성평등도서 폐기 흐름은 각 지역의 반동성에 세력의 적극성, 운동의 역량, 도서관-지자체의 대응 등에 따라 다르게 벌어진다. 이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벌어지는 현안을 차제연이 함께 겪으며 지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쌓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다면, 이 경험을 토대로 각 지역마다 벌어지는 사안에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정책활동까지 이어져야 한다. 지역의 정치 세력이 성평등을 선언하고 정책으로 반영해나가는 과정을 견인하는 개입의 과정을 만들자. 당장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성평등 지역 조례를 요구하고 지역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와 기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적 계기와 기점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보자. 성평등 정치의 목소리를 키우는 장을 펼치고, 그 힘을 정책으로 모아낸다면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국면에서 구체적 지역/정치에 성평등 정치를 기입하는 계획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성평등 정책을 지역의 정치인들이 반영할 수 있는 활동도 기획해보자. 성평등 정치에 대한 요구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요구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는 지방 정부만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하는 행정 부처인 교육부, 문체부 등과 같은 곳을 대상으로도 성평등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사회적-정치적 요구를 모아내고 압박하는 활동을 함께 고려되는 과정일 것이다.

토론 1.

충남 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 폐기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응 경험 속에서 지역 내 성평등 정치를 위한 지역사회/지역운동의 과제 나누기

- 이상미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저는 공주책읽는여성행동(이하 공책여행)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미입니다. 공책여행은 주 1회 만나서 페미니즘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8월 말경 충남도의회에서 예고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책여행 회원들에게 전해진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조례안이 충남 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를 퇴출시킬 수 있는 조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동안 공책여행에서 했던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저와 공책여행 회원 1명은 2019년 마포도서관에서 씩투창작소가 기획/진행하고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여성가족부의 주최/주관으로 열렸던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 포럼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나다움어린이책 관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충남 도서관에서 도지사에 의해 나다움책으로 불리는 성평등 도서의 열람 제한이 이루어졌고 공주시의 도서관 2곳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책여행 회원들은 공주시가 운영하는 두 곳의 도서관에 항의 전화, 민원 등과 더불어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공동행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행동들이 결국은 조례안의 개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발견한 직후, 우리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이 조례안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근활동가가 있는 조직적인 단체도 아닌 10여명의 공책여행 회원들과 그동안 함께 했던 충남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젠더교육활동가들이 모여 대응전략을 짜거나 회의를 할 여력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었고, 반대의견서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두 기자님의 취재 덕분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 미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힘당의 이상근 도의원은 폐기가 아닌 보완 수정하여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상임위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였고, 수정 후 재상정하면 즉시 알려달라는 부탁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나와 공책여행은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더불어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도시는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성평등 정치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안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공책여행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힘이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개개인과 공책여행처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모아 네트워크로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역 내 성평등 정치에 대한 필요한 담론/논리 전략에 대한 방향은?

지난 2023년 7월 28일의 여성신문¹에는 [“성평등 도서 폐기하라” 보수 단체 ‘악성 민원’에 도서관 몸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같은 해 5월부터 보수 학부모 단체 등은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등에 유해도서 목록 117종을 거론하며 일반 이용자에 대한 열람 제한, 대출 금지와 함께 폐기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혐오세력들의 조직적인 민원제기로 도서관 사서들은 곤혹을 치렀고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이에 응답하여 충남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에 열람을 제한했다”고 말한 사건의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남도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공책여행으로서도 무엇보다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직후 한 선생님이 ‘허들넘기’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누구랑 함께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누구랑 손을 잡으면 빛을 향한 한걸음 내딛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서”라며 저를 포함한 3명을 초대했습니다. 그 후에 공책여행 회원들도 참여하여 공주에서 8명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허들넘기’로 만나서 충남과 공주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분노만 했던 마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주시 소재 도서관 2곳에 성평등 도서의 대출 제한이 부당하다는 항의 전화와 함께 민원을 넣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행동독서회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공주의 도서관 입구 계단에 앉아서 공주행동독서회도 열어보고, 공책여행 책읽기목록(공책여행은 미리 읽을 책의 목록을 정해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에 금서로 지정된 책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은 공책여행 계정 페이스북에 올려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허들넘기’ 모임은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지만 대부분 공책여행 회원이었던 덕분에 그 경험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막연했던 분노가 구체화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통하며 일상에 스며들 때 행동하기 쉽습니다.

1 “성평등 도서 폐기하라” 보수단체 ‘악성 민원’에 도서관 몸살 /여성신문 (2023.07.28.) womennews.co.kr

충남에는 여성청년페미니스트와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청년 여성들과 공책여행, 젠더너머, 충남성평등교육전문강사단 등 중년의 젠더교육활동가들이 모여서 3.8여성대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3.8페미파티’라는 이름으로, 줌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짜고 할 일을 분담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소수였지만 함께 부딪치고 땀 흘려 운동했던(올해의 주제는 명랑운동회) 기억들이 네트워크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온라인 카톡 공간이지만 꾸준히 서로의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또 시간을 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허들넘기’와 ‘충남 3.8페미파티’처럼 내 옆에서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 소통하고 일상의 성평등 담론을 나누며 반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지역에서 성평등 정치의 지형이 조금은 넓혀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성소수자-지역-성평등-정치

-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 운동에 있어 ‘지역’이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의 연대체로, 소속단위는 인권단체, 학내 동아리/모임, 정당 내 관련 위원회 등 다양하다. 24년 9월 현재 소속단위는 총 46개이며 곧 47개가 될 예정이다. 서울권을 비롯하여 대구, 경남, 전북,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 기반을 둔 단위들이 있으나 47개 모든 단체가 단단한 구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단위일수록 그런 고민이 많다.

사실 지금의 한국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성소수자 운동은 정말 취약하다. 지역별 퀴어문화축제와 일부 커뮤니티 기반 단체를 제외하고는 성소수자 운동 단체와 자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지역별 퀴어문화축제 역시 활동가 개인의 자원과 네트워크에 많은 부분 의존하기도 하고, 지역 내 성소수자 의제 대응 또한 지역 차제연이나 지역 내 다른 인권단체, 정당 내 관련 위원회 등에서 조직/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까닭은 다양할 것이다. 전반적인 자원이 지역보다는 서울에 쏠려 있음은 물론, 스스로를 드러내야 다양한 관계 맺기, 커뮤니티 활동 등이 가능한 성소수자에게 지역 생활은 특히 부담일 수 있다. 다양한 인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서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것과 상대적으로 이러한 인적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도시에서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구가 광역시이긴 하지만 도시의 익명성이 없어요, 1회 때 사회 본 분이 얼굴 전체 마스크를 하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분장을 하고 사회를 보는 중에 누군가에게 등짝을 팍 맞았어요, “누구야!” 하니까 “저희 누나예요”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인걸 알았지, 싶었죠, 여하튼 대구에서는 축제에 오면 회사 사람, 동문, 집안사람 등 누군가에게는 알려져요, 그래서 서울과 다르게 지역에서는 용기가 천 배, 만 배 필요한 일인데도 참여자, 당사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 <평등으로 잇는 길 : 우리의 축제가 평등해야만 하는 이유>(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식지 [평등UP] 2023년 9월호) 중 배진교(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활동가 인터뷰

삭제된 자리를 서로 연결하며

게다가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지역 성평등조례 개악/폐지,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퇴출 등 성소수자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됨은 이러한 여건을 더 어렵게 하는 악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도들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 퇴행은 자유로운 활동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소수자’와 ‘검열’은 꽤 익숙한 관계이다. 이번 성평등도서 사태에서는 도서였지만, 전통적(?) 으로는 방송/영화 등 영상콘텐츠가 주로 타깃이 되었다. 2011년 KBS 2TV에서 방영된 <드라마스페셜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은 각 세대를 대변하는 레즈비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서 방송 이후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다시보기를 중단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으며, 2010년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방영 당시에는 혐오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2015년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경고를 받기도 했고, 비교적 최근 2021년 SBS는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랍소디>를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삭제 또는 모자이크)한 채 방영했다.

작년 개봉한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 상영 취소 사건은 특히 공공 도서관에서 일어나 성평등도서 검열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퀴어 마이 프렌즈>는 주인공 ‘강원’의 커밍아웃 이후 삶을 그의 친구이자 기독교 여성인 ‘아현’의 시선에서 따라가며 두 사람의 우정과 연대를 담아낸 영화이다. 제작진은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서초구립양재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반포도서관, 양재도서관, 송파도서관 3곳에서 “특정 단체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상영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작진은 무지개행동에 대응을 요청해왔고, 상영 취소에 대한 공식 기록을 확보 및 상영재개를 위한 연대성명 발행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뿐만 아니라 성평등 도서, 강연 등에 대한 검열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기도 했다.

한편 때로 지역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들려온다면, 그 발신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단체가 아닐 때가 더러 있다. 지난해 인천여성영화제, 올해 대전여성영화제에서는 성소수자를 다룬 영화를 상영작에서 제외하라는 지자체의 압박이 있었다.¹ 인천시와 대전시 모두 보조금을 손에 쥐고, 민원 핑계를 대면서 성소수자 영화를 (양)성평등 영화로 볼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다. 결국 인천시든 대전시든 지역 내 성평등 정치가 성소수자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소란스럽게 증명해주었고, 여성영화제들은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보조금을 보이콧함으로써 여성인권/성평등이 성소수자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멋지게 증명했으며, 이들을 응원한 수많은 시민들과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이 우리의 연결 감각을 다함께 증명했다. 이처럼 최초의 발신지는 성소수자 단위가 아닐지라도, 지역이 성소수자 운동을 만나는 계기들이 생기기도 한다.

사실 대전시는 2015년 지역과 성소수자 운동의 만남을 촉진한 지자체이기도 하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란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양성평등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시는 이에 응하여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1 꼭 여성영화제만이 아니라라도, 지역에서 활동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 부산 홍예당의 경우에도 문체부,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문화로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퀴어 소셜모임 홍예당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을 핑계로 한 지자체의 압박은 한 행사 또는 단체의 존폐를 압박하는 일이기도 하다.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이 지역에서 더 중차대한 위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조향을 삭제·개정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 등이 모여 서로의 연결을 확인하고 힘을 모았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이는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라(활동명)씨였다. 라라씨는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꾸고,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 몇 개가 바뀌는 일이 아니다”라며 “(성소수자 관련 조항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 도시에 있어도 괜찮다’는 위로였고, 자부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지원 및 보호 조항을 지워버린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어떻게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 김예지, "나는 여성이 아닌가? 여성가족부 똑바로 봐라" [현장] 성평등조례 개정 요청한 여가부 규탄 여성성소수자 쫓기대회, 오마이뉴스, 15.10.12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운동은 꾸준히 지역을 만나왔고, 지역 역시 꾸준히 성소수자 운동을 만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는 ‘검열’과 ‘삭제’가 오히려 그 만남을 주선하는 축진제가 되기도 하며, ‘성평등’은 서로의 연결을 확인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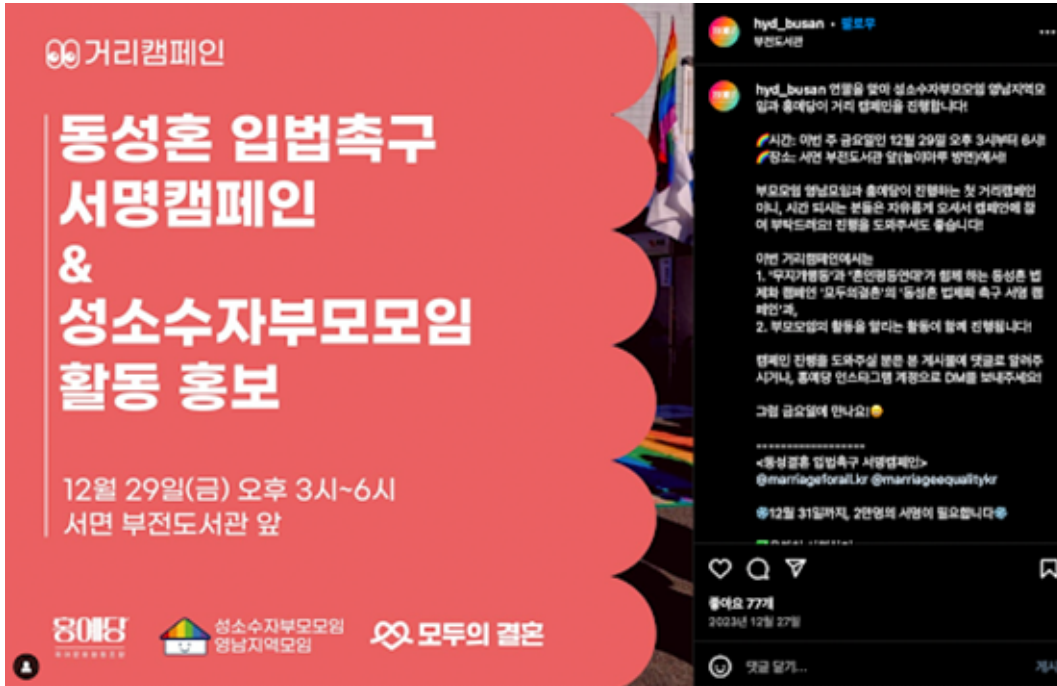
만남은 계속된다

한편 무지개행동은 최근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이하 모두의결혼) 캠페인을 시작하며 지역 기반의 대중 캠페인과 지역 시민사회 행사 등을 고민하고 있다. 모두의결혼 캠페인은 지난해 여름 시작한 동성혼 합법화 캠페인 조직으로,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구 가구넷: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 함께한다. 이 캠페인의 시작을 촉진한 데에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성소수자 운동의 전략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함²이었다. 이 캠페인으로써 힘과 전략을 모으고, 새로운 자원과 전략을 획득하여 또 다른 과제들을 돌파하는 데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모두의결혼은 기존의 서울 중심 보다 확장된, 그리고 성소수자 동료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 단위에서 연대를 모색하고자 하는 중이다.

물론 지역에서 함께 이런 활동을 해나갈 파트너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했던 혼인평등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은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기반 활동가들이 지역을 순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 커뮤니티의 리액션이 따라주지 않으면 역시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조건이 있다. 대구, 부산에서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역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운동의 구심이 되는 무지개인권연대와 홍예당이 각각 있었기 때문이다. 홍예당의 경우 기존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수 차례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인스타그램 등 채널을 통해 꾸준히 활동을 알렸다.³

2 성소수자에게 현재 한국의 제도적 환경은 황무지나 다름 없다. ‘성소수자’를 언급이라도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을 뿐더러(그냥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그나마 있던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등이 줄줄이 개악되거나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없다. 필요한 과제는 많은데 운동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힘과 전략을 모을 수 있는 구심을 구축하고자 했고, 차별금지법을 말할 때 약속이나 한 듯 혐오 세력이 내세우는 것이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라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답하기보다 정면돌파를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논의도 있었다.

3 우연히 부산 명소 소개 계정에 서명 캠페인이 촬영되어 엄청난 바이럴을 타기도 했다.



한편 모두의결혼을 계기로 강연/상영회 등의 지역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모두의결혼에서 먼저 제안한 행사도 있고, 지역 단위에서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여성민우회, 흥예당(부산),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제주녹색당/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등의 단위와 간담회, 강연, 상영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남을 가졌다.

서로의 공간이 되어주기

지역 내 성평등 정치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앞서, 성소수자가 지역 내 성평등 정치의 주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제도적 변화 역시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소수자가 보다 많아져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조건에서는 지역 내 성소수자가 주로 가시화되는 때는 퀴어문화축제를 전후일 것이다. 그러나 연 1회 개최도 힘든 상황에서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의 지역도 한정적이다. 지역에서 일상적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는 구심으로서의 단체나 모임이 있어야 지역 기반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흥예당은 부산의 퀴어문화협동조합으로서 2020년 초동 모임을 시작하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퀴어’와 ‘문화’를 매개로 부산 지역의 성소수자와 지지자를 모으고, 2021년부터 공간을 운영하며 퀴어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기반을 다져왔다. 2022년부터는 영남 지역의 성소수자부모모임을 위탁 운영 중이다. 지금은 서점이라는 문화 공간이면서, 부산 지역의 퀴어들이 모여 다양한 소모임을 진행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 구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로의 파트너가 되어가며 협업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한편 공간으로서의 구심점도 중요하지만, 계기로서의 구심점 역시 중요하다. 2020년 평등버스는 ‘차별 금지법’을 계기로 전국을 순회했다. 지역의 단위들은 평등버스의 엔진이 되기도 했고, 평등버스를 계기로 서로 만나기도 했다. 모두의결혼 또한 다양한 지역의 단위를 만나 혼인평등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11월~12월은 대만의 혼인평등 운동과 동성 부부 이야기를 담은 영화 <사랑하니까 가족이지>와 함께 지역 순회 상영회를 가지고자 조직 중이다. 혼인평등이 성평등과 연결되는 운동임을 이야기하며 동지를 모으고 함께하기 위함이다. 성평등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기에, 서로를 연결하고 서로의 공간이 되어주는 가장 최적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과 연결에 대한 욕망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와 소속단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단위의 운동, 단체에서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소통간담회 사전 설문 중 “무지개행동 소통간담회 사업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 혹은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에서는 다른 단위들과의 만남/연결 강화에 대한 답변⁴이 두드러졌다. 그렇기에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대한 활동뿐 아니라 단위들 간의 연결과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역할로 가지고 있으며, 활동가대회는 무지개행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는 연례 사업 중 하나이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활동가대회에는 매년 50명 내외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연중 진행되는 전체회이나 다른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단위들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무지개행동 소속단위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단위들도 참여할 수 있었던 지난해 제6회 무지개행동 활동가대회에는 6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고, 단체로는 총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빠듯한 시간이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를 받아가는 시간이 된다. 활동가대회를 기점으로 운동과 보다 깊이 관계 맺는 이들, 지역 안팎의 관계를 찾아가는 단위들이 분명 있으며 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역량을 강화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정답은 없을 것이다.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심이 될 수 있을 공간과 계기가 필요함은 지역 내 성평등 정치에서 성소수자가 주체로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무지개행동에서는 모두의결혼이 계기가 되고 있고, 부산의 홍예당 같은 지역 구심이 지역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결집하고 운동을 만들어나가고 있듯, 퇴행하는 시대에 맞서 새로운 상상과 즐거운 만남은 계속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평등의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연결되어있음을 이야기하며 드러내왔고, 이 여정은 각 지역의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도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함께해왔다. 지역 내 구심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있고, 그런 움직임이 포착될 때, 이들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4 “소속 단위들의 충분한 소속감”, “연대감”, “함께 활동하는 내용이 많지 않았던 소속단위들과 인사 나누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타단위들과의 연결감 강화”, “단체들의 공통 관심사를 알거나 활동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

그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간다

• 씨니(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정치 실현’은 한국사회의 지향점이자 곧 성평등 사회 실현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성평등 정치 실현’은 실제 국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대의기관에서의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는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부터 의회 안에서 성평등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것, 모든 정부 부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는 것, 많은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성평등 관련한 활동에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발화하게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등 다양한 범주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곧 ‘성평등 정치 실현’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음.

발제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기 위한 인권 제도 폐지,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제도화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적 상황에서, 성평등 정치와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평등을 어떻게 실현하고, 이것이 곧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함. 여성단체들도 각 지역별로 현 정부의 반(反) 여성, 반(反) 성평등 기조에 맞춰 목격되는 퇴행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 활동의 기반이 궁극적으로 ‘성평등 정치 실현’과도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음. 토론문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목격되고 있는 퇴행의 흐름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지역 여성운동 단체의 활동과 과제를 살펴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함.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음.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국민의힘 당론 발의 후 거센 반발로 통과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2024년 2월 여성가족부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은 7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임. 동시에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은 삭제되고 있는데,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지원 예산 삭감, 2000년부터 이어져온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이 있음.

이러한 중앙정부의 반(反) 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는 각 지역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 예시로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위상을 격하하거나 전담부서 이름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있음. 대전시의 경우 기존 복지국 산하의 여성가족청소년과를 교육정책전략국으로 이관하여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방향과 비전없음을 드러냈고,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 명칭이 ‘여성가족실’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여성 정책 개발이나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같은 전담부서의 주요 업무 범위가 축소되고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효율’과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다른 기관들과 통폐합하기도 함.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연구 기관은 지역의 고유한 상황을 분석하고 살펴 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이러한 연구 기관이 기관의 설립 목표와 주요 업무가 다른 기관들과 통폐합되었고, 이는 곧 지역 성평등 정책 연구 기능이 축소되고 약화되는 것을 뜻함.

〈지역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 통폐합 사례〉

통폐합 전 기관명	통폐합 후 기관명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사회서비스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통합 후 기관 축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직 중 일부는 부산연구원으로 이전)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검열도 하고 있는데, 2023년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 당시 퀴어 영화 상영 배제를 인천시 담당 부서가 요구한 것, 2024년 대전시에서 성평등주간 대전여성문화제 내 대전여성영화제에 성소수자 관련 작품 상영 중지를 요구한 상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저출생/저출산’에 대해 ‘인구 위기 담론’을 적극 활용하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는 단편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음. 정부의 이런 정책은 기존의 이성에 정상가족 범주에 속해 있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 위주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전혀 없는 기존 정책의 나열일 뿐임. 또한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을 활성화’하여 ‘국내 돌봄 인력난 대응하여 가정돌봄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돌봄 영역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제안일 뿐임.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조는 지자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경상북도는 여성아동정책관을 저출생극복본부로, 서울시는 양육행복추진반을 저출생정책추진반으로, 인천시는 가족다문화과를 인구가족과로, 세종시는 여성·가족정책을 인구·여성정책으로 바꾸면서 ‘인구’ 정책 패러다임 안에 ‘여성’과 ‘성평등’을 위치시키고 있음.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특히 거대 양당의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여성 분야로 분류된 정책들은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안전 정책의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거나, 저출산/저출생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결혼과 출산 시의 현금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책으로 ‘저출생/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움. ‘저출생/저출

산'의 이면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 이로 인한 여성의 가사·돌봄 시간 증가로 인한 시간빈곤 문제, 가사·돌봄 노동으로 인한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장시간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국의 노동 문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정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은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살피고 있지 않기 때문임.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추진체계 변화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실제 2023년~2024년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육, 가족 예산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 사회참여확대, 성주류화 예산은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목격됨. 특히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에 출생 및 출산 관련 사업을 포함시켰고, 성평등 인권보호 사업이나 청소년 대상 성평등 사업은 전체적으로 삭감·축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극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55.6%, OECD 국가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0.7%, 2023년 기준)은 낮은 편인데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역마다 편차가 큼.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성별 임금현황이나 고용형태를 분석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높고, 정규 직보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 정부는 '저출생/저출산', '지역 소멸'을 언급하며 '비상 사태'라고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지만, 실제로 정책과 예산을 분석해보면 핵심적인 성평등 관점은 빠져있는 것임.

이러한 성평등에 역행하는 퇴행적 흐름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기록하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이 성평등을 정치의 의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추진체계 모니터링 이후 각 지역에서 지방의회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토론회, 지방의원과의 정책 간담회, 워크숍 등의 대응 활동이 진행된 바 있음. 차별과 혐오, 폭력없는 성평등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여성운동은 각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성평등 조례 만들기, 지방선거 대응 등을 해왔으며 동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지역별로 활발히 진행 중임. '여성', '성평등' 의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다양한 의제와 연결되고 서로 연대하는 활동이 곧 성평등 지역정치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명백한 퇴행의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에서 '성평등 정치', 성평등 사회 실현이 시작된다고 믿음.

〈참고자료〉

- 김민문정(2024), 민선 8기 지역성평등정책 2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슈리포트 젠더 잇:다 2024년호 9월호
- 임선희(2024), 저출생 정책의 최근 동향과 여성·성평등을 삭제하는 방식의 정책 흐름 비판, [토론회] 낳지 않을 결심: 젠더불평등과 저출생 -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2024.7.23.(화)) 자료집

메 모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일시	2024년 9월 25일(수) 10:30 ~ 18:00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톡 @equalityact